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정책동향

Vol. 07

2013. 08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3 7. 1~7. 31)

건축문화 부문

- 목동 보건지소등 4개 공공건축물, 신진 건축사가 설계
- 민주평화광장 시민 의견수렴 착실히 추진
- 한옥은 비싸고 좁다? 이젠 옛말
- 제2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실시
- 제22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공모!
- 청년문화를 담은 컨테이너 활용 복합문화공간 탄생
- 7. 12 컨테이너 아트터미널(CATS)개관식 개최
- 서울한양도성 숙정문~춧대바위 구간 탐방로 정비

녹색 건축 · 도시 부문

-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는 녹색아파트 조성!
- 우리학교가 녹색모자를 써요
- 충북도 태양광 특화 '해품도 마을' 2곳 선정
- 서울시, 아파트 100개 단지에 관리비 줄이는 에너지컨설팅
- 대전시, 녹색복지 숲 조성사업 추진
- 광주, 국제사회에서 '환경 리딩도시' 인정 성과
-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9월부터 '온라인화'
- 시, 중대형 건축물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시 인센티브
- 건축주 부담줄어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국토환경디자인

- 우리 아파트 공사계획이 적합한지, 이제 자문받을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울시, 건축 전문 정보공유의 장 마련
- 공공주택, 주민이 원하는 만큼 고쳐서 사용한다.!
-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촉진 및 혁신도시 지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 공사 안전관리 강화

이슈와 연구동향 | 도시형 생활주택(2009~2013)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3년 8월호 (통권7호)

• 발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3. 08. 20 • 발행인 : 제해성 • ISS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TEL. 031-478-9845 Email. kslee@auri.re.kr(이경신)

건축도시분야	이달의 정책 Highlights	5
정책 Updates	정책 유형별 동향분석	6

건축문화 부문	목동 보건지소 등 4개 공공건축물, 신진 건축사가 설계	8
	제2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실시	8
	한옥은 비싸고 춥다? 이젠 옛말	9
	서울한양도성 숙정문~춧대바위 구간 탐방로 정비	9
	청년문화를 담은 컨테이너 활용 복합문화공간 탄생	10
	제22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공모	11
	민주평화광장 시민 의연수령 착실히 추진	11

녹색 건축·도시 부문	대전시, 녹색생활 우수사례·아이디어 수상작 선정	13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는 녹색아파트 조성!	13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12월 첫 시험	14
	우리학교가 녹색모자를 써요	14
	서울시, 아파트 100개 단지에 관리비 줄이는 에너지컨설팅	16
	대전시, 녹색복지 숲 조성사업 추진	17
	충북도 태양광 특화 '해품도 마을' 2곳 선정	17
	대전시, 녹색건축 인증제 시행 ... 녹색도시 조성 박차	18
	광주, 국제사회에서 '환경 리딩도시' 인정	19
	민선5기 광주, 세계 친환경 선도도시 발돋움	20
	광주시, 동네 한바퀴 '빛고을산들길' 조성	21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9월부터 '온라인화'	22
	市, 중대형 건축물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시 인센티브	23
	건축주 부담 줄여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24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우리 아파트 공사계획이 적정한지, 이제 자문 받을 수 있다	25
	서울시, 건축 전문 정보공유의 장 마련	25
	공동주택, 주민이 원하는 만큼 고쳐서 사용한다!	26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8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촉진 및 혁신도시 지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건인	28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 공사 안전관리 강화	29
	市, 아름다운 서울의 추억 만들기 위한 디자인 선정	30
	도봉동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본격 추진	31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	32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33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33
“2013 옥외광고 우수업체 인증제”	33
전북도 주관, ‘워크숍’ 개최로 ‘마을권역사업’ 활성화	34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관계기관 워크숍	34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35
‘창조마을’ 살기 좋은 도시재생 모델 정착	35
2013년 개발제한구역 친환경·문화사업 착수	36
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축된다	36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공포 시행	37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38
서울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 해제	40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부산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시행	41
쌈지공원, 동네쉼터 등 생활공원 조성사업 가시화	41
‘디자인은 수호천사’	42
‘13년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은 줄고 준공면적은 늘어	43
市, 마을공동체 1년 성과와 과제, ‘서울 마을, 자라나다’ 개최	44
원도심 일원 주요 현안사업들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해 북항 일원 원도심	
종합개발구상 연구 추진	45
「경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시, 경관형성·관리체계 구축	46
경기도, 도시개발·계획 업무 효율성 높였다	46
「해안경관 조망 공간」 17곳 지역의 관광 명소로 부상	47
제1회 도시재생 콘서트 개최	48
대구시, 전국 도시재생 중심에 섰다!	49
부산시,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50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현황, 한눈에 알아보세요	50
마곡지구 조기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개발계획 변경	51

이달의 정책 Highlights

▶ 건축문화 부문

이번 달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목동 보건지소 등 4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진건축사 대상 아이디어 공모가 있었다. 이번 공모전은 신진건축사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최초로 시행하였다. 지난 7월 11일에는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2013년 국토교통 테크놀로지 페어」를 통해 ‘우리가 찾고 싶은 한옥’이라는 주제로 한옥기술개발 성과와 적용사례를 소개하는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밖에 부산시 컨테이너 아트터미널(CATs) 개관식 및 제22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공모 등 지역별로 건축문화계에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 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정부 3.0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자 ‘건축을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14일이었던 검토기간이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백만 장의 A3 도면이 사라져 35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건축을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이밖에 서울시는 수소 연료전지의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자 중대형 건축물에 ‘수소 연료전지’설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광주광역시에는 2013 UEA(도시환경 협약) 샌안토니오 정상 회의에 참석하는 등 같은 날 세계 6대 ‘저탄소 리딩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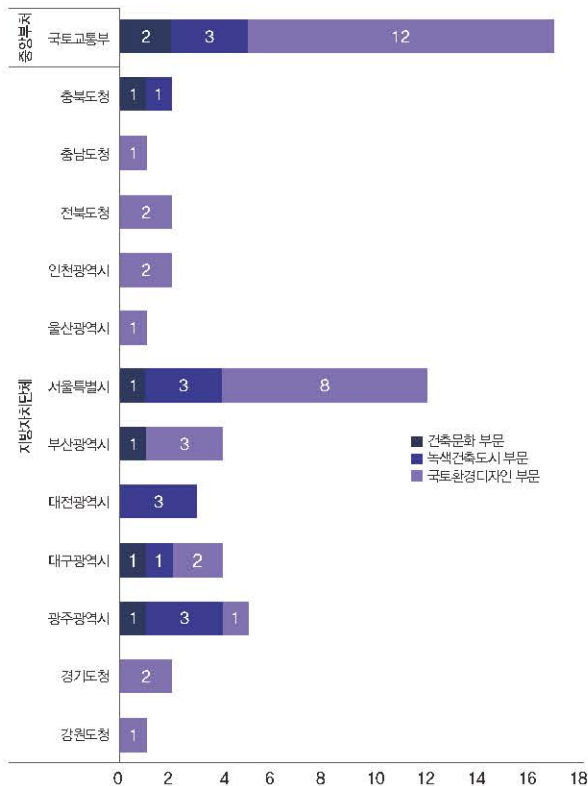
이번 달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지난 6월에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인 ‘도시공원(생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에는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하여 대상지 현장조사 방법 및 선정 일정 등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부산시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각 ‘범죄예방설계(CPTED) 가이드라인’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각종 주거관련 사업 계획시 적용할 예정이다.

정책 유형별 동향분석

2013년도 7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건축·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해당 주체에서 발표하는 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6건의 발표자료 중 중앙부처가 17건(30.4%), 지방자치단체가 39건(69.6%) 발표한 것으로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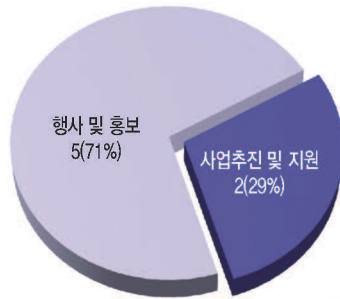


중앙부처에서는 총 17건 중 「국토환경디자인부문」에 관련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이 12건(21.4%)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중점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잠자공원, 동네 쉼터 등 생활공원 조성사업가시화사업」 등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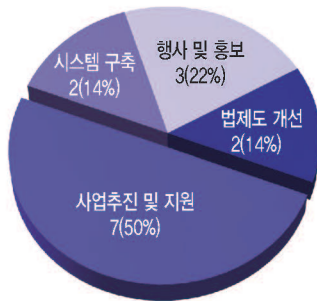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건축 전문 정보공유의 장 마련」 및 「충남,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지자체별 진행하고 있는 주요 시책 및 사업 39건(69.6%)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정책사업을 발표한 부문은 23건(41.1%)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으로 정리된다.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2(3.6%)	3(5.4%)	12(21.4%)	17(30.4%)
	합계 (중앙부처)	2(3.6%)	3(5.4%)	12(21.4%)	17(30.4%)
지방자치단체	강원도청	—	—	1(1.8%)	1(1.8%)
	경기도청	—	—	2(3.6%)	2(3.6%)
	광주광역시	1(1.8%)	3(5.4%)	1(1.8%)	5(8.9%)
	대구광역시	1(1.8%)	1(1.8%)	2(3.6%)	4(7.1%)
	대전광역시	—	3(5.4%)	—	3(5.4%)
	부산광역시	1(1.8%)	—	3(5.4%)	4(7.1%)
	서울특별시	1(1.8%)	3(5.4%)	8(14.3%)	12(21.4%)
	울산광역시	—	—	1(1.8%)	1(1.8%)
	인천광역시	—	—	2(3.6%)	2(3.6%)
	전북도청	—	—	2(3.6%)	2(3.6%)
	충남도청	—	—	1(1.8%)	1(1.8%)
	충북도청	1(1.8%)	1(1.8%)	—	2(3.6%)
	합계 (지방자치단체)	5(8.9%)	11(19.6%)	23(41.1%)	39(69.6%)
	총 계	7(12.5%)	14(25%)	35(62.5%)	5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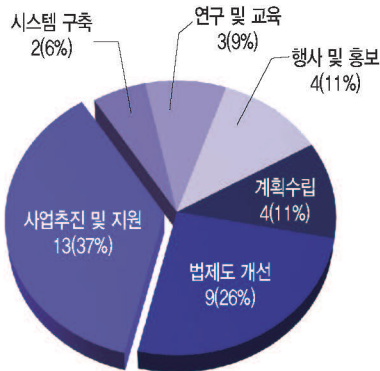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 건축문화부문



■ 녹색건축도시부문



■ 국토환경디자인부문

각 부문에 대해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문화 부문」은 전체 56건 중 7건(12.5%)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분야 2

건(3.6%), '행사 및 홍보' 분야 5건(8.9%)의 정책 사업들로 정리된다.

전체 56건 중 14건(25%)의 정책 사업이 발표된 「녹색건축 도시 부문」은 '법·제도 개선' 분야 및 '시스템 구축' 분야 각 2건(3.6%), '행사 및 홍보' 분야 5건(8.9%),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7건(12.5%)의 정책 사업들이 발표되었으며, 「국토 환경디자인 부문」은 '시스템 구축' 분야 2건(3.6%), '연구 및 교육' 분야 3건(5.4%), '행사 및 홍보' 및 '계획수립' 분야 각 4건(7.1%), '법제도 개선' 분야 9건(16.1%),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13건(23.2%)로 정리된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	4(7.1%)	4(7.1%)
법·제도 개선	—	2(3.6%)	9(16.1%)	11(19.6%)
사업추진 및 지원	2(3.6%)	7(12.5%)	13(23.2%)	22(39.3%)
시스템 구축	—	2(3.6%)	2(3.6%)	4(7.1%)
연구 및 교육	—	—	3(5.4%)	3(5.4%)
행사 및 홍보	5(8.9%)	3(5.4%)	4(7.1%)	12(21.4%)
총 합계	7(12.5%)	14(25%)	35(62.5%)	56(100%)

■ 부문별 세부분야

전반적으로 7월 보도된 정책과제들은 총 56건 중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의 정책과제가 22건(39.3%)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다음으로 '행사 및 홍보' 분야 12건(21.4%), '법·제도 개선' 분야 11건(19.6%)으로 나타난다.

목동 보건지소 등 4개 공공건축물, 신진 건축사가 설계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 위해 아이디어 공모 7월 12일까지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진건축사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대상 사업에 대한 기획 아이디어, 설계 개념 및 주요 착안점 등을 평가한다. 그동안 실적 및 규모 위주의 평가 방식 때문에 공공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신진 건축사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설계도면 작성 및 모형 제작 등에 따른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최초로 시행된다.

공모사업 대상은 서울 양천구, 충청북도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4개 사업으로,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응모 신청은 7월 3일부터 12일까지이며, 7월 26일까지 접수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제안서 심사 및 인터뷰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총상금 6,000만 원과 설계권(서울 양천구)을 수여하며, 당선 작품을 소개하는 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아이디어 공모가 기성 건축사 위주의 공공건축시장에 신진 건축사의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	사업명	제안 요청 사항
서울시 양천구	· 목동 보건지소	· 유사 시설별 연계 및 통합방안 제안 ·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실 특화방안 제안
충청북도	·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한 여성들의 휴식, 소통, 교육 등이 가능한 공간 제안 · 기존 여성발전센터와 연계방안 제안
한국수자원공사	· 대청댐 관리사택 리모델링 및 관광자원화	· 기존 관리사택의 eco-리모델링 방안 제안 · 장기 프로그램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외부 공간 활용계획 제안
	· 합천댐 효나눔 복지센터	· 기존시설을 커뮤니티 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안 · 기 운영 중인 시설(8개소)의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

2018.07.03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제2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실시

충청북도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도민 누구나가 참여하고 소통하며, 지역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공공디자인 발굴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의 도시 충북'을 주제로 '제2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일정은 6월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작품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0점(총상금 2,50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고 대상 수상작은 상금 5백만 원을 수여하며 수상작들은 작품집으로도 발간된다.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벤치, 가로등, 펜스, 휴지통, 음수대, 파고라, 플랜터, 상징조형물 등)로 우수작에 대하여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표준시설물로 인증하는 등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번 공모전이 우리

의 삶 터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충북의 삶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가미된 특색 있는 공공시설물이 충북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7.09
충청북도 공보관

한옥은 비싸고 춥다? 이제 옛말

국토교통테크놀로지 페어 시공비 기존의 60%, 단열성능 개선

한옥이 비싸고 불편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될 듯하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7월 11일(목)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3 국토교통테크놀로지 페어에서 시공비가 전통 한옥의 60% 수준이며, 단열 성능이 개선된 한옥 신기술을 개발하여 발표한다.

한옥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건강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일반 주택과 비교하면 건축비가 2~3배 비싸고 춥고 불편하여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한옥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시공비를 전통한옥의 60% 수준인 3.3㎡당 약 700만 원까지 낮추고, 단열 성능은 50%가량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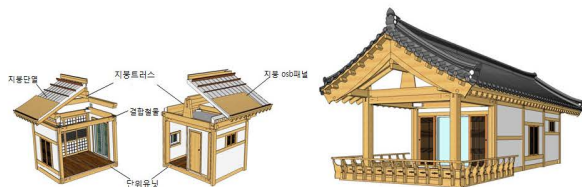
포럼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한옥기술개발 성과 발표회는 '우리가 짓고 싶은 한옥'이란 주제로 한옥 신기술 성과와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한옥기술개발의 성과와 비전', '신한옥 구축 사례와 기술', '한옥 신기술 확산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지며 한옥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한옥기술개발연구단(단장 김왕직)은 서울 은평한옥마을에 그간의 연구성과를 적용한 시범 한옥을 건립 중으로 '13년 8월 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며, 올해 경기도 파주시에 조성될

100채 규모의 한옥마을에도 한옥 신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신기술 성과를 민간에 널리 보급하는 한편, '15년까지 한옥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저렴하고 살기 좋은 한옥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공장-유닛 조립



현장-조립

■ 실험한옥 유닛모델동

2013.07.10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서울한양도성 숙정문~춧대바위 구간 탐방로 정비

서울시민들의 한양도성 탐방로 이용이 좀 더 편해졌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백악산 구간의 탐방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숙정문~춧대바위 구간 탐방로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화장실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말바위 안내소에 화장실을 증설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2월부터 시작해 7월까지 진행되었는데, 정문~

쫄대바위 구간의 소나무 군락 지역 보전과 토사 유실 방지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소나무 군락지 구간의 탐방로에 목재 난간 설치 및 바닥 판식 줄눈을 보수 정비하였으며, 많은 탐방객에 비해 부족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이 없거나 부족한 곳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방류 순환식 친환경 화장실을 말바위 안내소 하부 공간을 이용하여 증설했다.

또한, 서울 한양도성 사대문(四大門) 가운데 하나인 숙정문(북대문) 문루의 파손된 우물마루와 대문 등을 보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양도성 백악산 구간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한양도성(백악산 구간)의 탐방로를 정비했다”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바른 인식 및 가치를 보다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7.12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청년문화를 담은 컨테이너 활용 복합문화공간 탄생

7.12. 컨테이너 아트터미널(CATs) 개관식 개최

부산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동권 창조도시사업 중 강동권 청년문화를 위해 지난 4월 사상구 사상경전철 역 앞에 건립 완료한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사상인디스테이션(CATs)’을 오는 7월 1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유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지신잡기, 오픈 콘서트 등의 식전행사와 참여인사들의 축하 등에 이어 식후행사로 인디밴드 공연 등이 진행된다.

CATs는 해양물류산업도시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국제규격

의 화물수송용 컨테이너 27개를 활용하여 연면적 1,021㎡에 지상 3층 2개 동 규모의 건축물로 건립되었다. 젊은 층의 공연·전시·교육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연장, 전시장, 소규모 밴드공연, 전망대 등을 위한 ‘소란동’, 레지던스 작업·창작공간, 다문화 및 주민커뮤니티 등을 위한 ‘도란동’이 마주 보고 있는 구조이다.

CATs 운영은 (주)부산문화재단에서 맡으며, 공연·전시·각종 세미나를 중심으로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국제문화교류 공간으로 발전토대를 마련할 전망이다. 아울러 문화 다양성 확대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사상 지역의 문화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지역 문화 창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운영방향은 기획 및 상설 문화예술 공연으로 지역 청년예술가 대상 인디문화 중심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하고, 문화예술 기획자모임 지원, 기획사업 공모지원, 문화예술 전반적인 세미나 운영 및 지원 등의 청년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여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고 미술, 사진, 음악 등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장소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김해 경전철 환승역인 사상경전철 역 앞 광장은 공항, 기차역,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 경전철 등 향후 교통요지가 될 곳으로, 새로 개관한 CATs가 전국적인 새로운 문화명소이자 젊음의 광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사상인디스테이션(CATs) 전경

2013.07.11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제22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공모!

대상(大賞), 일반·공공분야 각각 금상¹, 은상¹, 동상¹ 공모

대구시는 건축의 공공기여도가 탁월하고 예술적 가치와 기술적 수준이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22회 대구광역시 건축상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지역 내 건축물 중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2년간)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구청장·군수 및 대구지역 건축 관련 단체장 [대한 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사)한국건축가협회 대구건축가회, (사)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 (사)대구건축문화연합] 추천을 받은 작품이다.

공모기간은 8월 9일까지이며,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로 추천서, 조감도 또는 현장사진, 작품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9월 중 심사를 거쳐 대상(大賞) 1점, 일반·공공분야 각각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1점을 선정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게 상패 등을 수여한다. 작품은 11월 18일

부터 11월 24일까지 개최되는 「2013 대구건축문화연합전」 행사 시 전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은 “대구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시민 삶의 질적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7.12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민주평화광장 시민 의견수렴 착실히 추진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5·18민주화운동의 장소성·역사성 재창출

광주광역시는 민주평화광장 조성과 관련해 기본구상을 마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민주평화광장 조성사업은 역사성을 재창출하고,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 광주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시민과 소통을 통해 기본구상(안) 마련) 5.18 민주광장이거나 금남로 정비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거론됐지만, 충장로, 금남로, 금남·충금지하상가, 예술의 거리 등 인접 상권의 이해관계, 공사기간 교통통제로 인한 민원 등을 우려해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민선 4기 후반기 10대 희망프로젝트로 선정하게 됐다.

이후 광주발전연구원, 대학교수, 건축·조경 등 전문가, 시 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기본구상 초안을 마련하고 충장로·금남로 지하상가·예술의 거리 상인회,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3차례 시민공청회, 대안별 선호도 조사,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시의회 전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3월 민주평화광장

기본구상을 수립·완료했다. 또한, 더욱 보람이 있는 것은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오로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무리했다.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창조) 민주평화광장 조성사업은 크게 1단계와 2~3단계 사업으로 나뉜다.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113억 원이 소요되며 문화전당 완공 이후 사업추진 시 또다시 도심이 ‘공사장화’되는 비효율 초래를 예방하고자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5·18민주광장에 있는 분수대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분수대 둘레에 실개천을 조성하고, 광장 바닥은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무등산, 5.18 당시 시민의 함성 등을 형상화하는 등의 광장 조성 시안을 마련하여 시의 회 설명, 시민 의견수렴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고사한 회화나무 부근 일대에는 330㎡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하여 아시아문화전당사업에 이미 반영된 종각·상무관 주변 공원의 대칭축에 녹지공간을 확충하면서 시민은 물론 방문객에게 보다 많은 휴식공간이 제공된다.

금남로 차도는 현재 5차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518m 구간을 화강암 블록으로 포장해서 도심서행을 유도하고 아울러 민주화의 상징 공간으로서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주변 빌딩과 상가의 간판정비사업도 이번 사업으로 동시에 추진된다.

(‘5·18민주화운동’기념공원‘국립 민주평화공원’ 비전 제시) 2~3단계 사업은 세계적인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한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전당 전면의 충장로 입구 일원 및 전일빌딩과 동부경찰서를 포함한 금남로 일원 등 32,750㎡를 ‘국립 민주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동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공약사항인 ‘5·18민주화 관련 상징

시설물과 공원화 사업’에 반영되어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추진 시기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향후 국비지원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평화광장, 세계인이 공유하는 자산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즉, 옛 도청 일원은 1980년 5월 역사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광주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미래의 꿈과 희망이 담긴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다.

민주평화광장 조성사업은 이 공간을 잘 가꿔 내년 말 완공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2013.07.08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대전시, 녹색생활 우수사례·아이디어 수상작 선정

우수사례 부문 박재신씨, 아이디어 부문 이선경씨 '최우수'

대전시가 주최한 제3회 녹색 생활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에 총 116개 작품이 응모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2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그중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박재신(37·서구 변동) 씨의 '게으른 도시농부의 스마트 베란다 텃밭'이,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이선경(45·서구 둔산동) 씨의 '벽화보다 계단그림 필요'가 각각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우수사례 부문의 '게으른 도시농부의 스마트 베란다 텃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동주택 내 자투리 텃밭을 조성, 상토 및 분갈이 등 토경관리의 번거로움과 텃밭 공간 협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친환경 수경재배를 소개하였다. 특히 펠트(PET)병 등 재활용품을 활용한 베란다 텃밭, 윈도우 팜(Window Farm)을 조성했으며, 수경재배 급수 및 인공 광원 제공 등을 위한 태양광의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디어 부문의 '벽화보다 계단그림 필요' 작품은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 4층 이하 계단에 에너지절약 및 건강 관련 그림을 그려 계단을 걸어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수사례 부문의 '녹색으로 도시와 농촌의 휴먼네트워크(갑천 누리길 그린봉사단)', '페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정 대기전력 줄이기(이성현·유성 공동)', 아이디어 분야의 '나무 키우기 앱(백나영·서구 둔산동)', '유리창용 단열 시트 시공(코레일 대전건축사업소)' 작품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의 우수사례는 책자로 발간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07.01

대전광역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는 녹색아파트 조성!

'2013 녹색아파트 시범사업' 사업설명회
(7. 4. (목) 14:00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그린스타트 대구 네트워크 및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녹색 생활실천 주민교육 등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가정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3 녹색아파트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7월 4일 오후 2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지구환경보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의 하나로 시행되는 '2013 녹색 아파트 시범사업'은 지난 6월 구·군으로부터 시범사업 참여아파트(중구 남산 휴먼시아 2단지, 동구 신암보성2차, 서구 광장타운 1차, 남구 효성타운, 북구 두산위브 2001, 수성구 범물 한라창신대성, 달서구 상인대성스카이렉스)를 추천받았다.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아파트의 주민대표, 부녀회장, 관리소장 등 관계자와 각 구·군 담당자에게 녹색아파트 시범사업에 대한 취지와 추진절차, 평가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앞서 6월 25일(화)에는 대구시, 그린스타트 대구 네트워크, 에너지관리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홍사단 등 5개 기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녹색아파트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녹색아파트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기준 선정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녹색아파트 시범사업은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 ~ 10월까지 4개월 동안 신청세대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아파트별 녹색생활실천 주민교육이 진행되며 11월 시범

사업 추진협의회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통해 우수아파트 선정 및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대상 1개소에 대해 3백만 원, 최우수 2개소 각 2백만 원, 우수 4개소 각 1백만 원의 시상금이 지원된다. 이 시상금은 LED 조명등 교체, 텃밭운영 등 녹색 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 “2013 녹색아파트 시범사업은 아파트 주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전력절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결과에 따라 겨울철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7.03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12월 첫 시험

녹색 건축물 전문 인력 양성...건축·기계·전기·신재생 지식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을 시행한다.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보급이 필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인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를 양성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1급 자격과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구분된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선다형 필기시험, 2차 서술형 실기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국가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 평가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 합격자는 자격 검정 시행자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직무 교육(5일간 총 40시간/시뮬레이션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이수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과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1차 시험은 올해 12월 초, 2차 시험은 내년 2월 말에 실시하고 3월 말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4월에 직무 교육을 시행한 후 최종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시작하고,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의 국가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7.03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우리학교가 녹색모자를 써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일환으로 학교 옥상녹화 대상지 20개소 선정

서울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교공동체 스스로 학교 내외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20개 학교 옥상에 꽃, 나무를 심는 에코스쿨 사업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버려진 옥상공간을 활용한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중점사업인 우리학교 우리 손으로 꽃·나무심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거 밀도가 높은 도심 내 녹지 환경에 학생들 스스로 꽃과 나무를 가꿀 수 있는 식재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

를 받아 공개모집을 시행, 총 57개소가 신청했으며, 6월 19일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옥상 공간 활용 가능 여부, 구조적 안전 여부, 실현 가능성, 학교의 적극적 의지 등을 엄정히 판단하여 노원구 서울상원초등학교 등 20개소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선정된 학교에 옥상녹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고, 식재와 관리 등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가 스스로 가꾸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옥상녹화는 꽃과 나무를 항상 가깝게 볼 수 있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전력난이 걱정인 무더운 여름철 냉방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옥상녹화지가 1㎡ 늘어날 때마다 냉난방에너지비용을 18,171원을 절감효과가 있고 비 녹화지보다 평균습도도 3.1% 정도 높게 나타나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푸르른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380개 학교에 꽃 44천여 본, 나무 53천여그루를 지원했으며, 특히 삭막한 학교 담장에 덩굴장미 2만 3천 그루를 지원해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등하굣길을 선물했다. 덩굴장미 1만 1천여 주는 산림조합중앙회의 후원을 통해 지원됐으며 서울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사업에 서울시가 일부 녹화재료를 지원함으로써 윈윈(win-win)사업의 본모기를 보여줬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에코스쿨 추가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자연체험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송파구 잠실초교 선생님, 학생들과 영산홍 100주 등 식재



■ 덩굴장미로 담장을 꾸민 학교

2013.07.05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시, 아파트 100개 단지에 관리비 줄이는 에너지컨설팅

서울시내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중 에너지다소비 100개 단지 대상으로 여름 전력위기 극복 위한 '대규모 아파트 에너지절감 컨설팅' 무료 실시

서울시가 여름철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 시내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100개 단지(자치구별로 에너지다소비 순 선정, 서울시 내 대규모 공동주택의 1/4)에 무료로 에너지 컨설팅을 해준다.

컨설팅에선 아파트별 전기설비 진단부터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에너지 낭비 부분 집중 파악, 설비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 제시 등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된다. 이렇게 제안한 방안들을 실천하면, 개별 가구의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현실성 있는 우리 아파트 맞춤형 절약 방안으로 에너지 절감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KT와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7월~8월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화) 밝혔다. 시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부터는 컨설팅 대상과 규모를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6월 27일 주식회사 케이티(KT)와 '서울시내 공동주택 에너지사용 컨설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사용 컨설팅 시행과 정보교류 수단을 마련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KT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에너지사용 및 절감방안을 컨설팅하고, 공동주택 내 수배전시설 및 공용부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또, 시는 KT의 실천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등의 정책지원을 함께한다.

(최근 3년간 전력사용실태 분석해 아파트관리비 절감방안 제시, 변압기 안전성 점검도) 컨설팅은 최근 3년간 전력사용 실태

를 분석해 가정 내 전기 사용현황을 파악한 후, 관리비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열 발생이나 누수 여부를 알 수 있는 변압기 부분의 열화상 진단으로 안전성 점검도 병행된다. 세부적인 컨설팅 내용은 전기설비·전력품질 진단/분석(변압기 BANK 부하를 손실분석, 누설전류 측정, 축전지설비 점검 등), 열화상 진단(특고압 인입케이블, 변압기 본체, 개폐기 및 차단기, 접속부 등), 전기 에너지 진단(전기에너지 사용실태 분석, 전력설비운용의 적정성 분석 등), 지하주차장 등 LED 교체진단 및 자동제어 시스템(디밍) 도입 등이다.

(조명등 LED 교체진단 및 자동제어시스템 도입 등 통해 10% 이상 에너지 절감 가능) 아울러 아파트 조명등, 지하주차장에 대한 LED 교체진단 및 자동제어 시스템(디밍) 도입 등 설비 교체를 통해 약 10% 이상 에너지(전기)절감이 가능한 방법도 제시한다.

현장 컨설팅에는 KT에서 구성한 진단반(3인 1조 3개 조 운영)이 투입되어 주당 12개소씩 월~목(공휴일 제외)에 이뤄지며,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은 담당 구청 에너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유례없는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이용과 절감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에너지 컨설팅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컨설팅으로 많은 시민이 모여 사는 대규모 아파트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실천문화를 조성함에 따라 올 여름 에너지 위기 극복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7.10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대전시, 녹색복지 숲 조성사업 추진

유성 학하동 '신생원' 등 4곳

대전시는 신생원(유성구 학하동), 다비다의 집(대덕구 대화동), 경일 복지원(서구 산직동), 대전시립제2노인전문병원(동구 하소동) 등 4개 복지시설에 대해 6억 7,000만 원을 들여 '녹색복지 숲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녹색복지 숲 조성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녹색 자금을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지원받아 복지시설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설별 특성과 지역적 특색에 맞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신생원은 자유로운 외부 출입이 제한된 환우들에게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신치유를 위한 힐링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건물 내 중앙부분 600㎡에 녹색공간을 조성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정서적 치유의 개념이 도입되며, 외부에는 인접 산림 내 자연적으로 형성된 등산로 정비와 편익시설 등을 설치해 인근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다비다의 집, 대전시립제2노인전문병원, 경일복지원은 입소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층에게 편안한 녹색쉼터 제공 등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유도해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지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다비다의 집'은 지상에 녹지 공간이 부족해 입소 노인들의 접근이 쉬운 옥상 부분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억 5,000만 원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천양원(유성구 장대동), 성애요양원(서구 관저동), 은혜요양원(중구 어남동), 후생학원(서구 경림동), 성우보육원(대덕구 연축동), 금성노인요양원(동구 상소동), 대전노인요양원(동구 가오동), 벨엘원(동구 인동), 실버랜드(중구 어남동), 해생원(서구 복수동) 등 시설 10곳에 녹색복지공간을 조성했다.

이택구 시 환경녹지국장은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이용자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성 사례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3.07.11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충북도 태양광 특화 '해품도 마을' 2곳 선정

충청북도는 8일 '해품도 마을' 조성 대상 마을로 영동군 백화마을과 괴산군 미루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품도 마을'은 '해품도'(해를 품은 충북도) 브랜드 홍보와 함께 충북의 태양광산업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 자립 및 태양광 체험 특화마을로서 그린 빌리지를 대상으로 한 전국 최초의 태양광 체험특화마을 조성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두 마을은 주민 참여도와 지역 특성 반영도, 사업추진 기대효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으며, 올해 마을별로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과 더불어 향후 3년간 마을소득 창출과 관련한 태양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영동군 백화마을은 황간면 완정리에 위치한 친환경 생태 전원마을로, 태양광주택과 고단열 스토로베일 하우스, 펠릿 보일러 등을 적용하여 조성하였고, 그린에너지 체험 마을 운영을 위해 마을회관 내 체험 교육시설 및 전시장 설치, 기후 생태 학교 운영을 위한 교자재 설치, 전·현직교사, 상담사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녹색에너지 체험 특화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괴산군 미루마을은 칠성면 사은리 산막이 옛길 초입에 위치한 귀촌 전원 마을로 한국형 페시브 하우스와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적용하여 조성되었으며, 마을공동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광가로등 등을 설치하고, 전·현직교사, 교사 등의 지식기부자 거주, 대형 커뮤니티센터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그린에너지 테마마을로 조성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해품도 마을'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한 충북 태양광 이미지 대내·외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은 물론, 주민 생활환경 개선, 주민 소득창출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해 타시도와 차별화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분석하여 도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 개발을 통해 2014년도에 2개의 ‘해품도 마을’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품도 마을 선정-괴산 마루마을

2013.07.08
충청북도 공보관

대전시, 녹색건축 인증제 시행 ... 녹색도시 조성 박차

친환경건축물 및 주택성능등급인증제
→ ‘녹색건축 인증제’로 일원화

대전시는 최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대전시 그린 빌딩 인정제도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기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증제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해 운영되며, 에너지 성능 평가를 위한 녹색건축인증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의 용어를 녹색 건물로 명칭을 전부 변경해 사용한다.

녹색건물 인증제는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 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필수항목을 적용하되, 자전거 보관소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2개 항목을 추가·운영해 타 시·도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박영준 주택정책과장은 “녹색인증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위해 미비한 시행지침 등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각종 세제혜택 및 건축기준(용적률, 조정면적 등)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해 녹색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7.15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광주, 국제사회에서 '환경 리딩도시' 인정

월드뱅크에서 광주를 「저탄소 리딩도시」로 선정, 2년간 125만 달러 규모의 공동사업 추진

강운태 uea공동의장(광주시장)은 미국 현지시간 12일 25개국 180개 도시의 시장이 참가한 '2013 uea 샌안토니오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도시간 환경정책의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강 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위기 극복을 위하여 회원도시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하고 2011년 광주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도시cdm" 개발 진행상황을 소개하는 등 uea¹ 공동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발표에서 광주광역시시는 uea-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광주시 합동으로 추진 중인 「도시cdm-도시 온실가스 예측·진단 프로그램」개발 진행상황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개발 중인 도시cdm이 국제적 탄소저감을 위한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라며 큰 호응을 나타냈다. 광주시는 2년전 「uea 광주정상회의」합의에 따라, UNEP(유엔환경계획)과 공동으로 세계 어느 도시에도 범용적 적용이 가능한 종합적인 「도시 환경 평가지표」개발과 함께 온실가스를 기준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새로운 탄소금융체계인 「도시cdm」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4년 개발이 완료되면 회원도시에 우선 적용 후 세계의 각 도시에 보급시켜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제안한 도시 cdm이 확산될 경우, 교토의정서 이후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도시환경체제로 정착될 전망이다.

이날, 광주광역시(uea사무국)에서는 「도시온실가스 예측진단 프로그램」을, unep에서는 「도시환경평가지표」에 대하여, 월드뱅크에서는 「저탄소 도시개발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발표하였으며, 회의에서 논의된 기타사항은 uea사무국에서 회원도

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결과 발표외에도 uea 회원도시에서 추진하는 우수 환경시책의 브리핑을 통해 환경정책의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폐회식에서는 홀리안 카스트로 샌안토니오 시장의 '샌안토니오 선언문'발표와 함께 강운태 uea 공동의장이 2015년 차기 uea 개최도시로 필리핀의 일로일로시(Iloilo City)를 발표함으로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한편, 광주시는 월드뱅크로부터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에 앞장선 세계 6대 저탄소 리딩도시중 하나로 광주시가 선정되었음을 통보받고, 향후 2년간 월드뱅크에서 125만불을 지원, 저탄소녹색도시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난해 6월 강운태 시장이 월드뱅크 직원 초청강연에서 광주시에서 개발 중인 도시 cdm의 세계도시 적용방안에 대한 제안 이후, 도시 주도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국제 질서를 열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월드뱅크의 공감속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앞으로 광주시가 국제 환경질서를 적극적으로 주도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UEA 집행위원회

¹ uea(urban environmental accords, 도시환경협약): '05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샌프란시스코에서 52개국 시장이 참석하여 구성한 환경 관련 지방정부 협의체이며 격년제로 회의 개최, 「uea사무국」은 광주에 설립



■ UEA-SCI 개회식

2013.07.15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민선5기 광주, 세계 친환경 선도도시 발돋움

다양한 국제행사·국제기구 설립·글로벌 환경과제 발굴 '세계 주목'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민선5기 3년 동안 각종 국제 환경행사 개최, 국제기구 설립, 다양한 글로벌 환경과제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제적인 친환경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광주시는 uea(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지구환경전망 세계 정부간 회의를 개최해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지난해 6월 브라질 리오에서 열린 'rio+20'회의에서 강 시장이 도시 환경평가지표 개발, 도시cdm 개발사업 등에 대해 특별강연해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열린 'uea 광주정상회의'는 unep(유엔환경계획)와 공동으로 개최한 대규모 첫 국제회의로, 국내외 120여개 환경도시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wb(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 1,030명이 참석해 규모와 품격 면에서 국내 최대 국제환경 회의로 평가받았다. 특히, ueama(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연합) 설립에 동의하고 사무국을 광주시에 두기로 합의함에 따라 광주시가 명실공히 국제환경기구를 갖춘 환경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3일 강운

태 광주광역시장과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ueama사무국이 문을 열어 uea가 명망있는 국제적 환경회의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

광주정상회의는 '도시환경평가지표 개발', '도시 청정개발체제(cdm) 개발'을 의제로 하는 광주선언문을 채택·발표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국제사회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이 사업들은 unep,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unfccc, wb 등과 함께 개발 타당성 조사, 매뉴얼과 기본 틀 개발을 순조롭게 마치고 2014년까지 등록과 회원도시 보급을 목표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2년 마다 정상회의 개최, 차기 개최도시 선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정관을 명문화해 uea가 정기적이고 연속적인 회의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 강운태 시장은 지난 12일 25개국 180개 도시의 시장이 참가한 '2013 uea 샌안토니오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도시간 환경정책의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강 시장은 이날 2011년 광주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도시cdm 개발 진행상황을 소개하는 등 uea공동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ueama 사무국, kei와 공동으로 '도시 온실가스 예측·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도시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감축성과를 진단하는 이 프로그램은 uea 회원도시 적용은 물론, 녹색기후기금(GCF)등 지원에 의한 도시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만드는 방안으로 국가주도인 교토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해 1월29일 환경정책 교과서라 불리는 '지구환경전망(geo-5)'을 최종 확정지을 '지구환경전망 세계 정부간 회의'를 환경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전 세계 저명한 과학자와 각국 정책입안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은행제 등 광주시 환경정책과 친환경산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가 환경선도도시로 발돋움한 데에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강운태 시장의 의지와 열정이 바탕에 깔려 있다. 강 시장은 미래도시의 주요 의제는 지속 발전 가능한 환경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그 중심에 광주시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제사회에 큰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각종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신생조직인 ueama가 기후변화대응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 국제행사 개최 등을 통해 광주의 위상이 높아지고 환경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라며 “환경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3.07.17
광주광역시 uea사무국

광주시, 동네 한바퀴 ‘빛고을산들길’ 조성

시민 의견수렴 통한 노선 확정, 6개 구간 81.5km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도심 외곽을 한바퀴 도는 광주를 대표하는 둘레길을 2014년 까지 조성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18일 전국 공모를 통해 ‘빛고을 산들길’로 명칭을 확정했다. ‘빛고을산들길’은 북구 용산교에서 삼각산, 군왕봉, 동구 잣고개, 남구 분적산을 지나 서구 금당산, 광산구 평동공단, 북룡산길, 송산유원지, 월봉서원, 진곡, 하남사업단지, 비아를 거쳐 다시 용산교로 이어지는 81.5km의 도심지 외곽을 연결하는 둘레길이다.

광주시는 도심외곽의 산과 들, 마을이 연속된 공간으로, 지

역 특색과 향토미가 있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녹색 예술길로 조성, 시민 건강과 소통,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빛고을산들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자치구별 순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을 확정하고, 이용객을 위한 안내시설과 휴게시설 등을 반영했다.

이처럼 ‘빛고을산들길’은 의미에 걸맞게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예술을 감미하여 가장 안전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한 길로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총 6개구간으로 기점과 종점을 정해 전 구간 걷기에 6일이 소요되는 기본계획 수립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녹색 예술길로 조성하며, 문화를 반영한 테마별 독특한 숲길로 광주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예코투어 관광상품으로 외지의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설설계를 올해 연말에 완료하고 탐방로 정비와 종합안내판, 노선 안내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위한 시설공사를 201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빛고을산들길’ 주변의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해 선조들의 열과 문화를 후세에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를 발굴하고 정리는 스토리텔링 연구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 관광홍보와 안내책자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원녹지과장은 “도심외곽의 기존 산길, 마을길, 강변길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자연 친화적인 트레킹길을 조성해 많은 시민과 외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안내 이정표와 노면정리, 휴게 및 편의시설 등 인공시설을 지양한 명품숲길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빛고을 산들길” 구간별 구분(주요지점 기준)

구간	기점 및 종점	거리	비고
계		81.5km	
1구간	북구 용산교(담양경계)~삼각산~도동고개	9.8km	담양, 삼각산
2구간	도동고개 ~ 찻고개 ~ 동적골	11.0km	동부 산악코스
3구간	동적골~자주봉~노대제~금당산~풍암저수지	12.2km	남부 산악코스
4구간	풍암저수지~전평제~만귀정~서창교~평동공단 ~ 평동저수지	15.5km	서창평야, 평동공단
5구간	평동저수지~송산유원지~황룡강~월봉서원	17.0km	황룡강변, 월봉서원
6구간	월봉서원~진곡~하남산단~비아~용산교	16.0km	북부 코스

▶ 전 구간 걷기 탐방 소요일 : 6일

■ “빛고을 산들길” 구간별 기점 · 종점 및 거리

2013.07.18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9월부터 '온라인화'

검토기간 14일→6일로 단축... 종이서류 없애
탄소배출 35톤 감축

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 및 검토가 온라인화 되어 검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백만 장의 A3 도면이 사라져 35톤의 탄소배출이 감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여 22일부터 전국에 시범운영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운동을 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이하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절약계획서 검토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건축허가권자(지자체)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로 전문기관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는 이미 온라인화 되어있는 건축허가 시스템을 이용해 절약계획서 검토를 신청하지 못하고, 별도로 전문기관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도서를 제출하여 검토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 등 절약계획서 검토절차를 온라인화 하여 인터넷 건축인가 시스템인 세움터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이서류 미제출, 검토절차 투명화, 검토기간 단축, 검토기관 방문대기 최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

라, 온라인을 통해 연계된 지자체·검토키관과 정보교류가 가능해져, 건축행정 서비스가 국민중심의 '정부 3.0 시대'에 맞게 발전할 것이다."고 밝혔다.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

2013.07.2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市, 중대형 건축물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시 인센티브

건축물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에서 가중치 부여로
설치비 절감 효과

앞으로 서울 시내에 중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면, 건축물 인허가 심의나 환경영향평가 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산정 기준을 보완해 '수소연료전지' 항목을 신설하는 자체 기준을 제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항목 신설을 통해 서울과 같은 도심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의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나아가 서울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지침 항목에 수소연료전지를 포함시킨 경우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시 발생하는 전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터빈발전방식에 비

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운영에 따른 소음이 없으며, 유해가스 배출이 1% 이하인 청정 고효율 발전시설로 설치면적이 크지 않아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가장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항목이 추가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며, 연면적 500㎡ 이상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각종 심의에서 적용된다. 산정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받게 되면, 실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보다 높은 수치의 에너지생산량을 인정받게 된다. 특히, 가중치가 부여될수록 설치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도 그만큼 절감된다.

향후, 시는 건축분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상하수도 설비를 이용한 마이크로 소수력, 건축물 공조설비 등을 활용한 풍력발전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자체 보정계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의 전용가스 요금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권민'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수소연료전지는 설치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청정해 서울과 같은 도심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이라며, "지침 항목에 수소연료전지를 신설함에 따라 고가의 비용 때문에 그동안 가정용 및 발전용 위주의 보급에 그쳤던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신축건물, 공공기관 건물 등으로 확대 보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수소연료전지 발전 원리

2013.07.23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건축주 부담 줄여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 상환, 연간 100억 투자로
2,8천명 고용효과

앞으로 창호 교체 등 건축물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용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건축주의 초기 공사비 부담을 줄여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74%를 차지해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에너지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24일(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려면 창호를 포함하여 건물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부 지원이 없어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때,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능검증 등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하여 국민들이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국토부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전문 기술인력도 육성할 계획이다.

건물 에너지 정보공개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업무를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배출되는 건축

물 에너지평가사의 업무로 연결시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금년 중 시범사업 및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성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고, 10월에 개최될 녹색건축한마당 행사(10.23~26, 코엑스)에서 녹색건축 설계 및 신기술 등에 대한 우수사례 시상식과 콘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경우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위기 극복, 새로운 일자리 창출, 건물 냉난방 비용 절감을 통한 국민행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07.24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우리 아파트 공사계획이 적정한지, 이제 자문 받을 수 있다

주택관리공단에서 자문 서비스 시범 실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용역의 계획이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를 전문기관이 자문 서비스하는 사업을 7월~11월에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아파트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공사나 용역을 실시하거나 반대로 건물 노후화를 초래하여 주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을 통해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타당성,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이 10여 개 단지를 선정하여 무료로 실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 자문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 서비스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7.03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울시, 건축 전문 정보공유의 장 마련

‘공공건축물 발주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건축 전문 사이트 오픈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건축물 발주체계 개선방안’을 목적으로 건축 전문 사이트(<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9600>)를 구축하고 연간 발주정보 제공 등을 통

한 정보공유의 장(場)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전문사이트는 서울시 공공건물의 연간 발주계획, 발주내용 실시간 공개, 현상공모 당선작 및 입상작 등 심사결과, 건축정책 정보 및 시민게시판, 해외전문사이트와 연계한 국내외 정보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분야별 정보” 메뉴로 들어가 상단에 있는 “주택·도시계획·부동산”→상단의 “주택건축”→왼쪽 메뉴의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순서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건축전문사이트 구축을 통해 공공건물의 발주정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더욱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트 오픈에 맞춰 공개되는 물량은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 SH공사의 발주예정물량으로 총 24건이며, 이후 추가로 계획이 확정되면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발주정보에는 발주시기, 설계비는 물론 위치, 사업규모 등 건축가가 현상공모 준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여 건축가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발주정보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심사과정, 심사결과까지 심사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 사이트에는 건축가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건축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건축인 한마당’을 개설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건축포럼의 장을 마련하고 제시된 의견들은 검토를 통해 건축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후 사이트는 해외 건축전문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 건축문화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용진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금번 건축전문 사이트 오픈은 건축가들에게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신뢰가 있는 건축문화의 정착을 통해, 시민에게 좋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만들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대상 공공건축물 발주(설계분야)계획 현황

구 분	설계비(천원)	총공사비(천원)	발주시기
계	10,421,316	646,683,368	'13.6월 ~'12월 (예정)
서울시	1,160,000	24,100,000	
자치구	1,762,966	49,783,368	
SH공사	7,498,350	572,800,000	

2013. 07. 03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공동주택, 주민이 원하는 만큼 고쳐서 사용한다!

국토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한다고 밝혔다.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동·세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টে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단지 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도 증축 등이 포함되

며,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배수관/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 증축(복도→계단식 변경) 등이, 세대 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없앨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별도의 면적 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단열재 등 난방 성능 향상, 주차장 신설 등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경우 호당 약 5천만 원 내외(TYPE I)로 공사가 가능하며, 중·대형 평형의 경우 ‘TYPE I’에 더하여 세대구분을 위해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화장실 설치 등)하는 경우 호당 약 7천만 원 내외(TYPE II)로 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중·소형 평형의 경우 ‘TYPE I’에 더하여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호당 약 8천만 원 내외(TYPE III)로 공사가 가능하다.

유형	구분	내 용	단 가 (만원/세대)
TYPE I (일반형)	· 설비·내장재 교체	· 급·배수 및 소방·전기설비 교체, 도배·장판 교체, 위생도기(세면기 등) 및 부엌가구 교체 등	1,600
	· 냉·난방 성능향상 충전소음 저감	· 고단열 창호 설치, 냉·난방설비 교체, 바닥 완충재 설치 등	1,200
	· 주차장·복리시설	· 주차장 신설(유류지/지하), 녹지·운동 공간 등 재구성, 부대·복리시설 개선	2,500
	합 계		5,300
TYPE II (중대형 세대구분형)	· TYPE I + 세대 구분	· TYPE I 공사비	5,300
		· 새로운 출입문 설치, 창호 교체, 실내 공간 재구성, 화장실 설치 등	2,200
	합 계		7,500
TYPE III (중소형 일부증축형)	· TYPE I + 코어변 경, 평면개선	· TYPE I 공사비	5,300
		· 승강기 신설(복도→계단식), 실내 공간 재구성(방·화장실 확장) 등	3,000
	합 계		8,300

한편, ‘TYPE I~III’와 같은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단지 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하여 수

평·별동 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으며, 세대별 면적의 증축 없이 수직 증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도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추진 중이나,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방식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 시행시기를 앞당기고(공포 후 6→4개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부터 수직증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정보는 8월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2013.07.05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6월 4일 제정·공포되고, 12월 5일 시행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라 함)」의 시행령안(6장 48조문)을 7.5일(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으며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대상 지역의 구체화 - 무분별한 도시재생 지역의

지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대상 지역(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구체화하였으며 요건으로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 2개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구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하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산업쇠퇴 지역은 지난 10년간 사업체 수의 최대치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하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한다. 주거환경 악화 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였다.

보조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역할분담 - 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건축물 개보수,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지원센터 운영비용, 마을기업 등의 사업기획비 등을 지원한다. 국가 지원의 규모는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도시재생 추진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지방재정여건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재정자주도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의 총 사업비 중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을 60%~80%로 달리 제시하였고, 매년 지자체의 도시재생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을 증액 또는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재생 추진체계 -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1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디자인, 환경, 방재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지자체에도 도시재생계획 심의·자문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일정 위원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미 지자체마다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지자체 부담을 낮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시재생제도 연구, 지자체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가 양성·파견,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 - 용적률, 건폐율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설치기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7.5일부터 8.16일까지이고, 10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정병운 국토도시실장은 '14년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12월까지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7.0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이용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역 내 공장 증축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크게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업소용 비닐하우스 설치 시 강풍, 폭설 등 재해에 전될 수 있도록 기초 부분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작물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시 기초 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있어, 기상재해에 취약하여 피해가 빈발하였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cm이하)을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 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연

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인 도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역 내 주민생활·기업 활동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07.04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촉진 및 혁신도시 지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견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촉진으로 투자유발,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는 7.11(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으로 혁신도시 건설 투자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013년 6월 말 현재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총 119개 중 절반 수준인 62개만 매각되었다. 또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자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업, 대학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으나 특별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혁신도시 내 기업 및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한 해체를 통해 부동산 매각을 촉진해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일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민간의 매입수요가 없어 미매각된 상태이다. 이러한 부동산 중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곳을 선별하여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산하기관의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토록 하여 계획적으로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 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어 재공고할 경우,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쟁 입찰 등 단순한 일반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던 것을 다양한 금융기법(PFV,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매각방식도 허용한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면,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6조 원의 조기 투자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a의 개발이익이 혁신도시로 재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한다.

9개의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500여 개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며 5천 명의 고용창출 및 최대 연간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

2013.07.11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기획과 지원정책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 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등 개선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에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법률」(건설기술 진흥법)이 지난 5월 22일에 공포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되, 개정규정으로 인해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 및 등록 요건)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를 설계·건설 사업관리(이하'CM')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분

2013.07.12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전문분야		등록요건(인력·사무실·자본금·장비)
일반	종합	ENG사업자 등, 특급2 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3억 원
	설계 등 용역	ENG사업자 등, 특급1인 포함 7인, 사무실, 자본금 1억 원
	건설사업관리	특급 1인포함 10인,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품질 검사	종합	품질시험기술사 2인 포함 7인, 시험실, 장비
	토목	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건축	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특수(7종)	기사·기능사 등 2인, 시험실, 장비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현재 발주가가 직접 검토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대형 시설물 공사의 계획은 전문성이 있는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받도록 함

(업역 통합에 따른 체계 정비 등) 감리와 통합된 CM의 업무 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감리 및 CM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준은 건설 사업관리 체제로 단일화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세부 기준을 마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13.6)됨에 따라, 공공분야 건축설계에 대한 PQ기준 및 용역평가 규정을 정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으로의 체계전환은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과 아울러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업계의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市, 아름다운 서울의 추억 만들기 위한 디자인 선정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물을 시민이 디자인하다!

서울시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시민공모전’의 2013년도 수상작 51점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아름다운 서울의 추억’을 주제로 서울의 광장, 공원 등에 설치되어 아름다운 서울의 추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벤치·의자 디자인 부분’, 서울의 광장, 공원 및 도심 내 가로변 또는 대형축제 등과 공유·공감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부분’ 등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총 257점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응모하였다.

작품심사를 위하여 서울시디자인위원회 등 관련 분야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벤치·의자 부분에서는 김진섭·강안나의 ‘Space O’, 공공시설물 부분에서는 백서경·김보혜의 ‘딱 정류장’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밖에 총 51점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9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작품은 실물로 제작하여 전시회를 개최한 후 작품 특성에 맞게 장소를 선정·설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의 몸과 마음의 휴식처가 될 공공시설물을 널리 보급하고, ‘소통’과 ‘공감’에 뿌리를 둔 ‘희망 서울’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모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디자인 서울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문1) 김진섭, 강안나 - Space O



■ 부문2) 공민경, 도현지 - 딱 정류장

2013.07.08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도봉동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본격 추진

도봉산 입구 관광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안)
수정 가결

서울시는 7월 10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대 새 동네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안에 대하여 심의 가결하였다.

도봉동 새 동네는 도봉산역에서 도봉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도봉산 등산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작년 8월부터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새 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수립을 추진해 왔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은 낡은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 대신 마을의 역사성·환경성 등을 보존하면서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정비·설치하고, 개인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발전 방향을 구상하면 서울시와 전문가 집단이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시는 향후 공사 착공 전까지 주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협정을 체결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지속해서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며, 공공사업은 도봉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11월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 도봉동 새동네 주민워크숍



■ 위치도



■ 마스터플랜(안)

2013.07.11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

서울시는 2013년 7월 10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을 '조건부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일대 약 11만 8천㎡에 대하여 기존 지구단위계획(2009년)을 재정비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결정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인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2010.11.25.)됨에 따라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특별계획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되도록 구역경계를 변경하였고,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금번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의 민원해소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유도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로운 개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상지 위치도

2013.07.11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공동주택 내 화합과 소통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7개 단지 선정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결과 7개 사업을 선정해 총 사업비 4,750만 원(단지별 600 ~ 900만 원 정도)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동육아, 청소년 프로그램, 텃밭 조성, 주민축제 운영 등 공동주택 내 입주민이 상호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업 중에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 선정했다.

대구시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이 화합, 소통, 나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단지명	사업명
신천청아람	신천청아람 한가족 커뮤니티
논공청구타운	에코아파트 “실천하는 당신이 바로 논공청구타운의 희망입니다.”
두산위브2001	도란도란 하모니 도서관 조성
죽곡하우젠트 아너스빌	나 먼저 참 좋은 이웃되기
월성서한	소통과 녹색이 있는 행복마을공동회 만들기 사업
보람타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람타운 행복학습 배움터」 조성 및 운영
트럼프월드수성	대구 범어천 생태포럼

2013.07.09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2013 옥외광고 우수업체 인증제”

7월 15일부터 8월20일까지 신청 접수

인천시(시장 : 송영길)는 옥외광고물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업 육성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2013 옥외광고업 우수업체’를 발굴·선정하여 인증하고 10개의 우수 인증업체에 대한 홍보 리플렛 제작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 계획’을 공고하고 추진계획을 군·구에 시달렸다.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신청서는 7. 15 ~ 8. 20일까지 군·구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1차로 군·구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거친 후 2차로 시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최종 우수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및 개별통보하고 오는 9월 말 행사를 통해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옥외광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옥외광고 전문교육인 “간판 디자인 아카데미(법규, 디자인, 실무교육)”와 같이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 옥외광고업 종사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우수업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를 통해 아름답고 특색 있는 옥외광고물을 제작·설치하는 업체를 적극 발굴·인증하여 우수업체를 격려 및 홍보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제작을 억제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아름다운 간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텐시브 : 리플렛 제작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농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62개권 역에 2,488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남원시 보절면 천항봉 권역 등 13개 시·군에서 46개 권역에 총 599억 원을 투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활성화와 성공적인 운영 등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사업관계자들의 소통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3.07.05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2013.07.09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추진단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관계기관 워크숍

5일 마을학교 운영 내실화 도모·지역리더 육성 등 기대

전북도 주관, '워크숍' 개최로 '마을권역사업' 활성화

시·군 마을권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 주관 워크숍 개최

전라북도는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사업 관계자인 시·군 공무원, 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안 능길 권역에서 4일과 5일,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도 미래농업과장의 정책강의, 사업추진관련 발전방안, 선행권역 사례발표, 사업관계자간의 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보다 현장감 있는 워크숍 진행을 위해 사업추진 우수권역인 진안 능길 권역에서, 현지 활동 체험 등을 병행 실시하였다.

한편 전라북도는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충남도는 5일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마을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주대와 충남발전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컨설팅사 등 마을학교 운영기관과 도 및 시·군 희망마을 만들기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가하였고 충남발전연구원의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성과 및 과제’에 관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행복마을사업단 단장인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의 ‘충남의 희망마을 만들기 취지와 마을발전계획의 수립’ 설명과 시·군별 희망마을만들기 추진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시·군별 희망마을만들기 추진 사례발표에서는 논산시와 홍성군 농촌개발담당자가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실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희망마을로 이끌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 추진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7.05
충청남도 농촌개발과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해오름의 낭만과 해변의 파노라마가 있는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 추진

강원도는 2013년 「강원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으로 양양군이 신청한 “해오름의 낭만과 해변의 파노라마가 있는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도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투자하여 낙산 해변과 어울리는 특화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는 전체 6개 시·군이 응모하였고, 1차 서류 심사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심사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적정성, 실행가능성, 지역의 문화적·자연적 환경과 조화, 주민협의 및 참여도, 사후관리대책, 전문가 활용여부 등을 심사평가하여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낙산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해변과 어울리는 쾌적한 경관 및 이야기와 콘텐츠를 접목한 특화된 공공디자인 창출을 위하여 자동차 없는 가로환경 조성, 건축물 디자인 정비,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등을 정비·확충하는 사업이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지역 문화와 역사를 살린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 개발 및 확산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적 지역명소,

지역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유희 공간 활용, 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장애 없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2013.07.07
강원도청 기획관실

‘창조마을’ 살기 좋은 도시재생 모델 정착

민선 5기 주거·문화 등 어우러진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및 마을선정사업 실시

광주광역시와 민선 5기 역점사업인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실시 중인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성공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광주시는 도시재생의 비전을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창조적 도시재생’에 두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행복한 주민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은태 시장은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시재생으로서의 주변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웃 간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사업의 성패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스스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주민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전문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마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철저한 주민 주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지속가능한 마을의 발전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마을의 활동가 양성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마을활동가 양성학교’를 NGO 시민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배출된 마을 활동가는 6월부터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는 지난 2011년 5개 마을, 2012년 5개 마을, 2013년 7개 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 2014년 7개 마을 등 총 24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11년 선정된 1차 창조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을 내 재생사업을 통해 사람중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도심내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됐다.

1차 5개 마을에 이어 2012년부터 시작한 2차 지원2동 주남마을 등 5개 마을에서도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5기 들어 시작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 1·2차를 거쳐 3차에 이르는 동안 여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창조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성공모델로 육성해 전 지역에 파급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3.07.09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2013년 개발제한구역 친환경·문화사업 착수

태화저수지 경관사업 등 5개 사업, 오는 2014년 2월 완료

2013년 개발제한구역 친환경·문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들에게 녹색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개발제한구역 친환경 문화사업’을 7월 착수, 오는 2014년 2월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5월 8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13년 개발제한구역 친환경·문화사업’에 9개 사업을 응모하여 5개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비는 총 27억 5,000만 원(국비 21억 7,000만 원, 시비 5

억 8,000만 원)으로 경관조성 2건, 누리길 2건, 여가녹지 1건 등이 추진된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중구 태화저수지(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 울주군 온양대골못(테크, 조명, 운동 시설 설치 등)은 경관사업이 추진되며, 중구 입화산참살이숲(14km), 북구 강동사랑길(1.7km)은 누리길 조성사업이, 남구 솔마루길(테크, 파고라, 체육시설 등)은 여가녹지사업이 각각 실시된다.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발억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 증진과 생태적 문화적 자원 활용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3.07.10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축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시·군 이양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및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3.7.16일 공포하고 '14.1.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하여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하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들게 된다.

현재 도시주변에서 공장, 창고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기반시설 부족, 환경·경관 저해 등의 난개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하여 기반시설, 건물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

대신,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건폐율 40%→50%, 용적률 100%→125%) 적용한다.

③ 재해취약지역은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앞으로, 상습침수·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방재지구 내 건축물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차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내 재해 피해를 줄이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3.07.16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공포 시행

업소 당 간판 총 수량 지역에 관계없이 2개 설치
광고물 실명제 시행 대상 및 기준 마련

전라북도는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을 정비를 위하여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조례를 총28개 조항으로 구성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경우 이번 개정 규정을 적용받으며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업소 당 설치 가능한 간판 총 수량은 종전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3~4개(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도 조례에서는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2개로 규정하였고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종전시행령과 시·군 조례에서 규정하던 16개 종류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5개 종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등 10개 종류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옥상·지주이용 간판,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등 3개 종류의 세부 표시기준을 추가」하여 총 14종류의 광고물 표시방법을 도 조례로 규정했다.

③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관광지·관광단지 등에서 특정구역역을 지정하여 간판의 총수량,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기준, 표시위치·장소·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등에서는 특정구역 지정하여 간판의 총수량,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기준, 표시위치·장소·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④ 광고물정비 시범구역 등에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광고물을 정비한 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아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금번 도 조례의 시행으로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은 물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7.15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3종)」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7일부터 20일간(기간 7.17~8.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지난 5.6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후속 조정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가. 현장과 시험실 측정값 일원화

(현행) 바닥구조 인정시 아파트 시공현장과 표준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하여 인정하였으나, 실제 아파트와 달리 시험실은 방 및 거실의 형태, 배관 등의 미설치로 인한 시험조건이 달라 소음 측정값의 차이 발생으로 실제 소음치 반영에 어려움

(개선) 시험실의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소음 차이를 최소화하고, 성능측정은 시공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실 측정시에는 현장 측정치와의 차이에 대하여 보정을 실시하여 소음 측정치를 현실화

나. 중량충격음 측정방법 추가

(현행) KS기준에 따라 뱅머신(타이어, 7.3kg)으로 측정하였으나 뱅머신은 실제 충격을 일으키는 아동보다 두배 이상 충격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저주파대의 소음 패턴도 상이

(개선) 임팩트볼(배구공크기, 2.5kg)이 뱅머신에 비해 사람

이 느끼는 청감상 유사하고, 저주파에서는 낮고 다른 주파수 영역에서는 높아 실제 충격음의 재현성이 뱅머신보다 우수하므로 임팩트볼도 측정방법에 추가 하되, 뱅머신에 비해 충격력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여 편차 3dB 보정(측정치에 3dB를 더함)하여 평가

다.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

(현행) 차단구조 품질관리는 차단구조를 인정 받은자가 자체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인정기관은 필요시 자체품질관리 기록·보존내용의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차단구조를 인정 받은자가 자체품질관리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곤란

(개선) 인정기관이 차단구조를 인정 받은자의 공장의 상태, 인원 및 조직, 재료 등에 대한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로 질적 향상을 도모

라.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샘플 시험

(현행) 완충재를 적용하는 표준바닥구조의 경우 완충재의 품질이 성능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시공하였으나 완충재 등이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

(개선) 완충재 등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샘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합격자재를 사용토록 구체화

마. 완충재 등 주요 완충구조의 성능평가 강화

(현행) 완충재의 밀도, 동탄성계수, 흡수량, 가열후 치수안정성에 대한 성능측정 기준 제시되어 있으나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시험과 기타 주요구성품에 대한 성능측정 기준이 미제시

(개선)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시험을 추가하여 장기 처짐에 대한 시험을 강화하고, 주요 구성품(예, 고무발의 경도 등)에 대한 품질시험 항목을 인증기관의 세부운영지침에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②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가. 기준분류 체계 변경

(현행) 그 동안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7개), 사용을 권장하는 권장기준(7개)로

분류하여 규정 하였으나 최소·권장기준에 오염물질 저방출 기준, 시공 관리기준, 오염물질을 억제하거나 저감시키는 기준이 혼재

(개선) 오염물질을 저방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한하여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준(의무 기준, 9개), 준공 이후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억제하거나 저감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준(권장기준, 4개)으로 재분류하고 바닥에 사용하는 흡착보양제는 창문, 인테리어, 가구 등의 후속공정 진행에 지장 초래로 실효성이 없어 적용에서 제외토록 함

나. 빌트인 가전제품 성능기준 강화

(현행) 빌트인 가전제품은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5.0\text{mg}/\text{m}^3$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 $0.05\text{mg}/\text{m}^3$ 이하로 규정

(개선)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강화하는 취지 및 선진국에서도 서도 전자제품의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4.0\text{mg}/\text{m}^3$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 $0.03\text{mg}/\text{m}^3$ 이하로 강화추진

다. 오염물질 억제, 저감 성능기준 강화

- 흡착·흡방습 자재

(현행) 입주후 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흡착·흡방습 자재는 성능평가기준 등급을 양호, 우수 등으로 구분하고, 양호 이상에 대해 인정

(개선) 시중 판매제품의 성능 편차가 크고 현행 기준치보다 낮은 제품도 있어 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높이고 업체의 기술개발 유도를 위하여 단일기준으로 통일하고 양호 이상 수준에서 결정

- 항곰팡이 자재

(현행) 항곰팡이 자재는 청정건강주택 기준 제정(10.12)시 건축분야에서 처음 도입 분야로(KS 시험규격도 없음) 최소한의 기준치를 설정

(개선) 대부분의 자재가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어 성능 향상

을 위하여 기준치를 상향 조정

라. 오염물질 방출자재 적용 추가

(현행) 오염물질 방출을 규제하는 내장마감재의 일부가 관리되지 않아 실내공기질 관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개선)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나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되어 온 실내 몰딩재와 실란트, 내부 출입문을 오염물질 규제 대상에 추가

마.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 실시

(현행) 현장 반입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기준 등에 관한 확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선) 현장반입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감리자가 확인토록 하고, 건축자재 등이 이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샘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입주자 사용설명서 배포

입주후 환기설비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가전제품 작동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배포토록하여 입주후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사. 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

(현행)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건강주택건설기준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자체평가서대로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절차가 부재

(개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자체 평가서'대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토록 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③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현행) 주택법에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맞게 시공하는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음

(개선)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등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감리자의 업무에 포함하여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범위에 포함

이번 행정예고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하고 '14.5.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3.07.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울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 해제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검토·추진

국토교통서울시는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 용두3 주택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전에 대하여 7월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5개 정비(예정)구역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구역 4곳으로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 ‘제기동 67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77-1 일대’,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대’이며, 주택재건축 구역 1곳으로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 이다.

지난해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되어 총 64개 구역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8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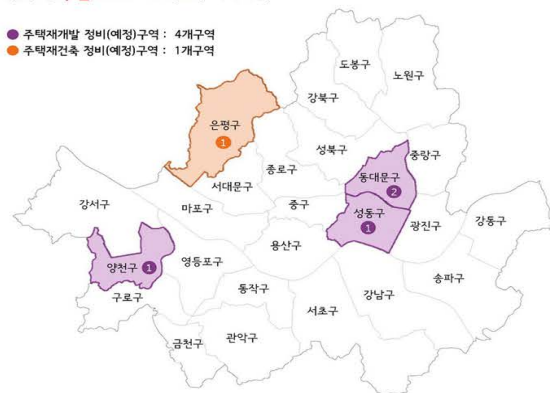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를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자치구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사업방식
동대문구	22	용두동	39	2.4	190	60	12층 이하	1	재개발
동대문구	12	제기동	67	9.8	190	60	12층 이하	2	재개발
양천구	5	신월동	77-1	3.7	190	60	12층 이하	3	재개발
성동구	25	금호동3가	574	5.5	190	60	12층 이하	3	재개발
은평구	22	불광동	23	4.4	170	60	5층	2	재건축

● 해제지역 분포도 - 5개소 (4개 자치구)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분포도

2013.07.18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부산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시행

부산시, 새로운 선진형 안전시스템(CPTED) 선제적 도입

부산시는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아파트단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단지의 신축, 재생, 가로 및 주차장, 공원 및 녹지, 어린이 놀이터 등을 정비하는 경우다. 설계기준을 살펴보면 주차장은 접근통제시설(경비실, 차단기)이나 보안설비(CCTV, 비상벨 등)를 설치하도록 하며, 어린이 놀이터는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주민에 의한 보호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권장한다. 또한, 골목길의 방범용 CCTV 주변에는 충분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며, 시민이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권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부산시 관련부서 및 16개 구·군 등 관계기관에서도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규 주거단지 또는 기존 주거단지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준과 방향 및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범죄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시·교육청·검찰·경찰 등 4대 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아동·여성·장애인·노약자 등)를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부산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2013.07.15

부산광역시 도시경관담당관실

삼지공원, 동네쉼터 등 생활공원 조성사업 가시화

지자체 설명회 개최로 대상지 1,000개소 선정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6일(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LH연구원 대강당에서 시·도 및 시·군 80여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중인 '생활공원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자치단체별 대상지 현황조사 결과와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전문가들이 논의한 대상지 선정기준(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향후 진행될 대상지 현장실사 방법 및 선정 일정 등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인 '도시공원(생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공원 취약지역이면서 서비스 효과가 큰 곳부터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기본방향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구체화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되는 '도시공원(생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연말까지 생활공원 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00개소 포함 2017년까지 총 1,000개소의 생활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초로 시행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쾌적한 그린인프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사직근린공원(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산1-24일대)



■ 영축산근린공원(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870-1일대)



■ 평고개근린공원(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03-1일대)

2013.07.16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디자인은 수호천사’

경기도,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CPTED) 개발 완료 공공사업
우선 적용과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가 디자인을 통한 환경 개선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

mental Design)’ 가이드라인 개발을 완료했다.

셉테드 디자인은 좁고 어두운 골목길, 칙칙한 담장 색깔, 관리되지 않은 공터 등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을 통해 개선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기법으로 ‘범죄예방 환경 설계’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시작한 경기도 범죄예방환경설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최근 완료하고, 도내 구도심 정비 시범사업 등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주변에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해 범죄 심리를 차단할 수 있는 범죄예방 표준가이드라인, 공간별 디자인매뉴얼, 범죄예방 체크리스트 활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좁고 복잡하며 어두운 골목길에 조명을 설치하고, 칙칙한 담벼락에는 밝은 색깔로 도색해 분위기를 바꾼다. 또 방치된 유휴공간에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휴게공간을 마련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범죄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거주자는 안심하고 범죄심리는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각종 기기의 도입도 권장한다. 골목길 진입구에 골목 내부 상황 정보를 제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안전게이트, 항상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점멸식 CCTV, 휴대폰과 컴퓨터로 마을을 보고 지킬 수 있게 한 주민감시형 IP CCTV 등이다.

경기도는 우선 구도심 주거 정비 사업인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 8곳(시흥 은행동, 수원 매산동, 남양주 금곡동, 평택 신장동, 팽성읍 안정리, 시흥 거모동, 은행동, 의왕 이동)과 농어촌 건축디자인시범사업 대상지에 셉테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각 시군이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해 셉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셉테드 매뉴얼이 적용된 곳에는 ‘경기도 지사 안전마을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유한옥 디자인담당관은 “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구도심 정비와 재생 사업 분야에 범죄예방 시스템 적용을 점차 확대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IP 카메라
• 외부선 인터페이스 연결하여 사용하는 카메라
• 내·외부에서도 원격 감시를 휴대폰으로 가능



스마트폰 앱(앱)을 통한 감시
• 앱을 통한 실시간 감시 가능
• (고정형 IP카메라)



■ 경기도CPTED 적용마을 사진

■ 공개형 IP CCTV 사진과 스마트폰 앱



■ 골목길 입구 안전게이트 설치

2013.07.22
경기도 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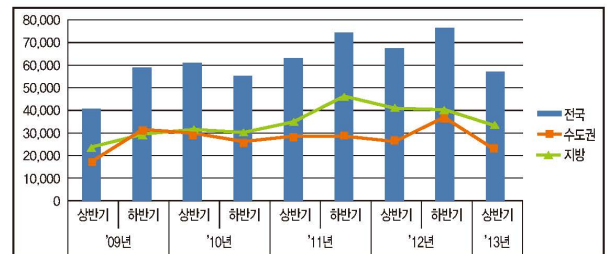
'13년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은 줄고 준공면적은 늘어

건축허가 면적 15.1% 감소, 준공은 16.1%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은 '12년 상반기보다 15.1% 감소한 57,025천㎡(110,346동), 착

공면적은 5.3% 감소한 49,698천㎡(92,102동), 준공면적은 16.1% 증가한 59,783천㎡(82,260동)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허가면적이 2,741천㎡(10.5%) 감소, 착공 및 준공면적은 각각 1,960천㎡(10.8%), 4,896천㎡(22.4%) 증가되었으며, 지방은 허가와 착공면적이 7,370천㎡(17.9%), 4,719천㎡(13.8%) 감소, 준공면적은 3,416천㎡(11.5%) 증가되었다.



전년 동기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 현황은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주거용 5,208천㎡(20.2%), 상업용 836천㎡(5.0%), 공업용 682천㎡(8.3%), 문교사회용 155천㎡(3.0%) 모두 감소하였고, 착공면적도 주거용 1,602천㎡(7.8%), 상업용 131천㎡(1.1%), 공업용 317천㎡(4.3%), 문교사회용 450천㎡(11.0%) 모두 감소하였다.

준공면적은 주거용 3,872천㎡(23.9%), 상업용 143천㎡(1.2%), 공업용 2,968천㎡(29.3%), 문교사회용 795천㎡(14.3%) 모두 증가하였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 상업용 : 근린생활, 자동차관련, 판매, 운수, 숙박, 업무시설 등
- 공업용 : 공장
-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등)
-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2013년 상반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대비 건축허가 면적은 '10년 51.2%, '11년 3.4%, '12년 5.7%로 3년 연속 증가한 반면, '13년은 15.1% 감소하였다. 특히, 지방(17.9%)이 수도권(10.5%)에 비해 감소율이 높았다.

둘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허가면적이 모두 감소하였고,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전체적인 허가면적은 감소하였으나, 판매시설은 증가하였다.

상업용을 살펴보면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각각 24.3%, 3.7% 감소하였으나, 판매시설은 30.3% 증가하였다.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탁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셋째, 오피스텔의 경우 허가, 착공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수도권의 준공면적이 553천㎡로 전년 동기대비 158.5% 증가하고, 지방은 370천㎡로 89.4% 증가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먼저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7%인 50,463동, 100~200㎡ 건축물이 20,640동(18.7%), 300~500㎡ 건축물이 14,591동(13.2%)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42,530동으로 전체의 46.2%, 100~200㎡ 건축물이 16,762동(18.2%), 300~500㎡ 건축물이 12,590동(13.7%) 순이었다.

멸실 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과 상업용이 각각 2,527천㎡(21,673동), 1,348천㎡(4,915동) 멸실되었고, 공업용과 문화·사회용이 633천㎡(666동), 216천㎡(304동) 멸실되었다.

주거용을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전년대비 각각 178.0%, 12.4%로 많이 증가하였다.

상업용을 살펴보면 판매시설이 전년대비 27.6% 증가한 반면,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각각 32.5%, 16% 감소하였다.

2013. 07. 3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市, 마을공동체 1년 성과와 과제, '서울 마을, 자라나다' 개최

분야별 7개 마을사례에 대한 토크콘서트 및 전시, 공연을 통해 1년 성과 정리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 1년을 돌아보고 정기적인 전략과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7월 16일(화) 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마을사례 발표 및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부 토크콘서트에서는 마을공동체 7곳의 사례를 토크콘서트, 전시, 공연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였고, '쉽고 작고 재미난' 마을 사업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다. 2부 시민토론회는 마을공동체 사업 1년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마을활동가와 시의원 등 마을공동체 전문패널 5명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7개 마을공동체 사례: 강북 엄마들의 아마추어 극단- '강북 무지개맘', 종로 창신동의 마을방송- '창신동라디오 텀', 성북 장수마을 마을기업- '동네목수', 상가지역 청년문화의 힘- '예찬길', 책으로 깊어지는 이웃- 북카페 '책읽는 마을', 우리가 꿈꾸는 아파트- '이펜하우스', 안전하고 믿음직한 마을- 연리동 '소금길'

서울시는 잊혀져간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 회복을 위

해 '12년부터 '마을공동체 회복'을 중점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2개 사업 222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현장 사례를 통해 지난 1년간 마을공동체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지 체감해 보고 앞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2년 시민토론회



■ 염리동 '소금길' 사례

2013. 07. 15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원도심 일원 주요 현안사업들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해 북항 일원 원도심 종합개발구상 연구 추진

부산시는 남항동에서 서면으로 이어지는 원도심 축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성대부두(북항재개발 2단계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북항 일원 원도심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구상(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22일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의 조기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발전연구원과 공동 연구팀을 7월 중에 구성하여 '북항 일원 원도심 종합개발구상안' 수립 연구에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종합개발구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항재개발 1단계사업,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군수시설 이전(8부두, 55보급창) 등 다수의 지역 현안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제기되었던 도시계획 및 지역 전략사업과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동북아 해양수도로서 부산 원도심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대상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관련 정부계획 및 단위사업에 대한 종합검토, 지역별 최적 도입기능과 부지활용계획(안) 등을 핵심 내용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업(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과 주요 지역 현안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계획과의 연계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데, 금번 연구를 통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도심 일대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 07. 25
부산광역시 항만물류과

「경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시, 경관형성·관리체계 구축

인천시는 최근 「경관법」 전부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 (13.6.27)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어, 법이 시행되는 2014년까지 경관형성 및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관법」 개정법안은 그 동안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제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경관관리가 취약한 점을 개선하여, 도시내 주요한 경관형성요소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신설하고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역을 포함해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등은 법적으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경관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등 경관법 시행에 따른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은 「경관법」 개정은 경관관리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관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법적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14년까지 인천시 여건에 맞는 경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미 인천시는 금년 1월 1일부로 지자체 최초로 「경관법」 개정 (안)에 따른 경관심의제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은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경관법 시행에 맞춰 관리대상의 세부범위를 경관조례로 결정하여 경관심의의 제도적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경관계획에 있어서는 「경관법」 제정이전에 수립한 시가지, 수변, 야간 등 경관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에 훼손이 되고 있는 도서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도서 경관계획’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인 행사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추어 ‘제2차 경관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도시 인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인천시 경관변천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협정’ 등 「경관법」에 따른 주민참여제도를 더욱 강화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공포되고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군·구, 경제청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바뀌는 경관법에 대응한 인천시 경관디자인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3.07.29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추진단

경기도, 도시개발·계획 업무 효율성 높였다

‘국토계획법’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

경기도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전국 광역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143건을 집대성해 760여 쪽에 달하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 광역단체들은 국토계획법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국토부와 질의 회신을 주고 받았고, 유사한 사례에 관하여 질의·회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사안별로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도는 이 사례집을 활용하면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토부의 유권해석 없이도 신속하게 국토계획법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 사례집을 도 관련 부서 및 31개 시·군과 전국 광역 시·도에 배포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기도 E-BOOK (ebook.gg.go.kr/

home/list.php)에 게시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 회신 사례집

2013. 07. 30
경기도 도시주택과 도시관리팀

「해안경관 조망 공간」 17곳 지역의 관광 명소로 부상

경주 주상절리·순천 조망 공간 등...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커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조성한 “해안경관 조망 공간” 17곳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즐겨찾는 전망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해안경관 조망 공간”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10년에 전국의 해안권 소재 시·군으로부터 제안공모를 통해 아름다운 해안경관 풍광 17곳을 선정하고, 안내시설·조망데크·보행로 등 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여 '12년까지 조성을 완료한 관광시설이다.

주요 명소를 살펴보면, 「경주 주상절리 조망 공간」은 경주시 양남면 바닷가에 부채꼴 형상, 위로 솟은 형상, 누워있는 형상 등 각양각색의 주상절리들이 1.7km에 걸쳐 펼쳐져 있고, 보행로와 포토 존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작년 9월 ‘경주양

남주상절리군’이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지정되었고, 주말 관광객이 5~6천여 명에 달하여 활어회 센터, 식당, 편의점, 펜션, 건어물 판매소 등 40여 개 업소가 신규 개점하는 등 경주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곳이다.

태안군 소원면 「개목마을 조망공간」은 기존 군부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곳으로, 당나라 시인 이태백(李太白)이 머물면서 갯바위에 글귀를 남겼다고 전해지는 태배해변과 인근의 칠뱅이섬(일곱 개의 섬) 등 서해의 절경과 낙조를 볼 수 있어 여름철 서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조망 공간」은 순천만으로 이어지는 남도삼백길 1코스에 조망 공간(2층 153㎡)·포토존·쉼터 등이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순천만의 갯벌과 세계적으로 희귀한 흑두루미, 노랑머리저어새 등의 철새와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다.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에 조성된「해금강 우제봉 조망 공간」은 전망데크(181㎡)와 탐방로(524m)를 설치하여 남해안의 비경인 해금강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부산, 동해, 강진, 여수, 고흥, 보성, 광양, 남해, 통영 등에도 지역의 대표적 해안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전망 명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위치 및 관광지 정보는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홈페이지(<http://www.col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안경관조망공간 구축사업에 이어 국토부가 추진중인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의 경우, 아직 사업이 완료되기 전인데도 아름다운 해안 관광마을로 변모하면서 관광객이 몰려들어 카페와 상점이 연달아 개업하는 등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주민체감형 지역개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경주 부채꼴 주상절리



■ 순천만 일몰

2013.07.31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기획단 기획총괄과

제1회 도시재생 콘서트 개최

열세가지 빛깔의 도시재생 이야기가 펼쳐진다.

대구 '미로마을?', 춘천 '낭만골목?' 다소 생소하지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우리나라의 대표도시 재생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제주 올레길', '북한산 둘레길'을 알지만 '앞산 맛둘레길'은 모르는 사람, '한국의 산토리니' 또는 '마추픽추'로 불리는 마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7.12(금)일 대전 토지주택연구원 강당에서 전국 각지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이 소개되는 '제1회 도시재생네트워크 도시재생 콘서트'가 열렸다.

본 행사는 도시재생 관련 지식·정보 공유를 위해 민간·학계·연구원·지자체 등이 모여 창립한 「도시재생 네트워크」의 첫 번째 행사로서,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참가한 13개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인구감소, 노령화, 산업의 침체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주민들과 지자체의 자생적 노력으로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과 탐이 담겨있다.

'미로(迷路)같은 골목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美路)'로 발상을 전환한 대구 달서구 미로마을, 노령화·노후화가 심각한 서민 주거지역을 재생하는 춘천의 '낭만골목', 과거 담배를 생산하던 연초제조창 건물을

'99년 폐업 후 예술작업공간으로 바꾼 청주 사례 등은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 따라 지역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 迷路에서 美路로(대구 달서구 미로마을)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은 피난민들의 거주지였던 산복도로 주변 마을을 '한국의 산토리니, 마추픽추'로 마케팅하고, 영주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근 현대 건축박물관 등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중심으로 재생을 추진, 영월군은 석탄산업 침체를 '석탄을 캐는 마을에서 박물관 문화를 캐는 마을'로 돌파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곳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도시재생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군산과 인천은 각각 일제강점기 융성했던 내항(內港)과 서구문물의 개항(開港)지였던 역사를 테마로 재생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 중구는 경상감염, 약전골목 등을 활용한 '근대路의 여행'을 추진한다.



■ 영월군 별빛폭포, 라디오스타

과거 번성했던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재생프로젝트도 있다.

청주시 중앙동은 '90년 이후 인구가 50%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빈 점포 신탁, 청소년광장 조성 등 상인회와 전문가의 노력으로 유동인구가 '11년부터 '13년 2년 사이에 4배가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고, 광주 동구도 도심공동화로 인구가 1/2(31만 → 10만)로 급감했지만, 예술창작 공간 제공,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실사구美'프로젝트 등을 통해 도시 활력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번 행사로, 그간의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도시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정취와 공동체를 보존하면서도 주민이 행복한 도시재생 사례가 전파·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 동구 '실사구美' 프로젝트

2013.07.1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대구시, 전국 도시재생 중심에 섰다!

도시재생네트워크 주최 「제1회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회」 대상

대구시는 7월 12(금) 대전 한국토지주택연구원에서 개최한 제1회 전국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앞산 맛둘레길” 팀은 대상, “골목길로 떠나는 근대路의 여행” 팀은 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올렸다.

심사의 주안점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했으며, 전국에 유사 사례가 없는 독창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조례·조직 구성 등 사

업추진체계 구축, 사업성과 및 수상경력, 지역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대상을 수상한 남구 “앞산 맛둘레길, 남구의 날개를 달다” 팀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앞산 맛둘레길(현충삼거리~빨래터공원)조성사업과 문화·예술 생각대로(영대네거리~명덕네거리)조성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우수상을 받은 중구 “골목길로 떠나는 근대路의 여행” 팀은 낙후된 원도심 대상으로 기 추진됐던 근대문화골목 디자인개선사업, 종로·진 골목가로환경개선사업, 대구음성 상징거리조성, 남산화원 둘레길 조성,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과, 신규 사업 향촌동 문화거리조성사업, 근대문화골목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통합 연계해 건축문화·역사지원을 활용한 근대역사문화벨트 네트워크 구축 및 도심재창조 사업을 제안했다.

현재 대구시는 발표한 우수사례 외에도 달성토성 때문에 건축제한이 많았던 서구 비산 2,3동 일원의 행복한 날뽕골 만들기 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수성구 만한 1,2동과 범어 2동 일원의 해피타운 프로젝트, 구 상업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중구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과 조성사업 등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시 자체 발굴사업인 서구 내상 2,3동 일원의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도심낙후지역의 폐·공가를 정비 후 텃밭, 주차장,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폐·공가 정비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시재생 아카데미」, 도시재생 포럼 및 도시재생 시민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도시재생의 날개를 달다

2013.07.16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

부산시,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부산시는 7월 19일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마을활동가와 마을 만들기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과 마을활동가 양성계획 등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를 위한 이해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실시되었다.

부산시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등과 관련한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의 역동성과 열정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과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조성과 낙후지역 환경개선 중심의 재생기반 구축을 위한 제1기(2010~2012년)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제는 주민주도 자립중심의 공동체 활력,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경제 기반형을 토대로 제2기(2013~2015)도시재생이 출범된 만큼 문화와 철학이 내재된 지속 가능한 자생·자립 중심의 창조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13.07.19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현황, 한눈에 알아보세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이하 마을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은 온라인플랫폼(www.seoulmaeul.org)을 7월 29일(월) 공식 오픈한다.

이번에 새로 오픈되는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상담, 교육, 지원사업, 알림마당, 참여마당, 기관소개 등 총 6개 메뉴로 구성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교육, 지원사업 등의 신청이 이루어진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홈페이지 메뉴	
상 답	상담소개 및 신청
교 육	교육소개, 찾아가는 마을 강좌, 지정/필수 교육, 강사정보은행
지원사업	지원사업소개, 씨앗기(모임형성지원), 새싹기(실행지원), 성장기(마을계획수립지원)
알림마당	공지사항, 소식, 자료실, 웹진(준비중)
참여마당	커뮤니티게시판, 커뮤니티 맵, 묻고 말하기
기관소개	센터장인사말, 기관소개, FAQ, 찾아오시는길

■ 홈페이지 메뉴

또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참여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고자 마을살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도 신설해 운영한다.

특히, '참여마당'의 '커뮤니티 맵' 코너에서는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의 활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구내 사업 참여자(모임)간 네트워크의 단초를 마련한다.

마을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기능 확대를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자(모임)간 정보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3.07.29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곡지구 조기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개발계획 변경

마곡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17일(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시는 첨단 융복합 R&D단지로 조성 중인 마곡지구 개발
계획 변경(안)이 7월 17일(수)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
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마곡지구 기본계획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지하철 출입구 및 주차장 등 교통인프라 개
선’, ‘교육, 육아 등 사회복지문화 인프라 확충’, ‘기존 시가지
도로선형 유지 및 단독주택용지 위치변경 등 주민건의사항
반영’, ‘입주기업 및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반영’ 등 수요자 중
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핵심으로 마곡지구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인 마곡지구가 첨단
융복합 R&D단지 및 업무·상업단지로 조성되면 대기업과 중
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거점이자 동북아 국제교류 중심지
로서 동북아 관문도시, 기술개발과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는
창조거점, 차세대 서울 경제를 견인하는 융합산업의 전초기
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지식산업 혁신기지로써의 역할
을 기대하고 있다.

서노원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
로 산업 및 경제적 환경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
해졌다”며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확정
된 만큼 토지분양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어 마곡지구의 조
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3.07.18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담당관

이슈와 연구동향 #3

도시형 생활주택 (2009~2013)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가구 유형이 분화되면서 1~2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구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은 3~4인 가구 중심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로 기존 소형주택 공급량만으로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을 통해 1~2인 가구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9월 주택법을 개정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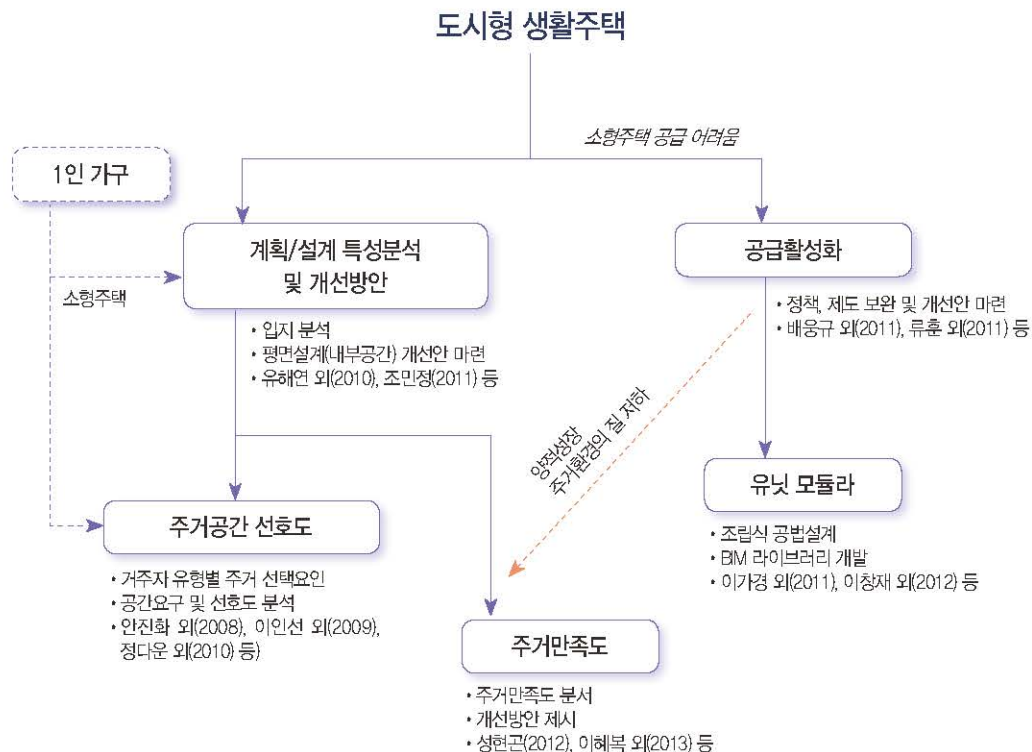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도입이후 나타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세부 주제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동향 (~2008)

그동안 소형주택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유형의 새로운 대안으로 노인공동생활주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입주의사를 결정하는 수요자 특성을 규명하거나(유병선외, 2005), 노인의 신체적 기능저하를 고려해 노인공동생활주택 실내를 구성하는 마감재와 색채에 대한 선호를 알아보고 노인주거환경 실내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거나(홍이경, 2005;2008), 도심형 노후 공동생활주택 설계안을 제시하는 연구(주서령외, 2008)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들의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저출산·고령화와 이혼 및 독신의 증가로 노인가구 외의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금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연구의 주제에 따라 분류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 및 설계방향’에 관한 연구와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 및 설계방향’에 관한 연구는 설계기준이나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연구되었으며, 관련연구는 이후 실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나 ‘주거 선호도’를 파악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연구들로 확장되었다.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정책의 보완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 ‘유닛 모듈라’ 개발 및 공급에 관한 연구로 발전되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연구 흐름도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설계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인 가구 위주
주택공급 과잉 초래 ·
3인 이상 주택 전세난 키워”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및 적용기준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왔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공급기준 완화 정책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양적인 성장만 부추기고 있어 주거환경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하나 현재까지 지나치게 원룸형 중심으로 건설이 이루어져, 2~3인용 소형주택 공급은 부족한 반면 1인용 원룸만 과잉 공급되는 등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계획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유해연, 심우갑 (2010)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의 경우는 단일 건물로 계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후건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건설되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보다는 사업 진행이 용이한. 반면,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대지 확보, 기존 거주자 간의 합의, 공동주택관련제도 충족, 기존 도시 구조와의 연계성, 사업성 부족 등을 원인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p133)
- 제도적 완화를 통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는 80~90년대 정부의 양적 주택공급 정책에 의해 나타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문제점을 재현할 것이므로,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무엇보다 필요한. 공공에서는 지역·지구별로 적합한 모델 유형을 제안하고,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단지계획 측면의 계획지침이 제시되어야 함.(p120)

신상영(2010)

- 노인독신가구는 전통적인 도심지 입지 경향이 강한 반면, 젊은 독신자들은 대학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저렴주택은 외곽지역 보다는 기성시가지에서 중심지와 대중교통체계를 근간으로 공급되어야 함.(p93)

-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하여 '썩방' 형 고시원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 필요. 줄어드는 소형주택 재고를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함.(p94)

이현숙, 양승우 (2012)

- 건립실태 분석에 따르면 54.33%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설되었고,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중 원룸형이 84.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이는 아파트 형식으로 대량 공급되던 주거상품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필지개발 주거상품으로 전환되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p300)
- 도시형 생활주택의 밀집도와 지하철 및 대학과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대학 보다는 지하철이 특징적인 입지 요소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임대료 수준을 감안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의미함.(p300)
-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리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거환경 측면에서 과거의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같이 과밀·난개발로 인해 도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음.(p301)

조민정 (2011)

- 우리나라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은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단위세대 분리에 제약이 있음. 계획적 측면에서 건물의 배치와 단위세대 공간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공간의 가변성을 지원하는 구조·설비·실내제품 시스템의 개발 및 실무적용 확대가 필요.(p164,166)
- 단위세대와 복도 공용공간의 일조, 향, 채광, 환기 등 환경적 측면이 제대로 고려되어 있지 않음. 인접 건물과의 대응과 자연조건의 유입을 확대하는 공간계획 필요. 환경 조절을 위해 공간 배치와 외피 시스템 계획을 연계할 필요 있음.(p166)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완화, 주거환경의
질 저하로 이어져
부대·복리 시설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인동거리 기준, 주차장
확보 필요”

- 제도적 측면에서는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소음, 공기, 조경, 주차시설 등과 관련된 현행 건설완화 조항을 보완하고 건물의 유지 관리 및 화재 안전 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p166)

장아름, 모정현(2010)

- 해외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다양한 평면과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 건물, 같은 층 내에도 원룸부터 1bed, 2bed 등 여러 형태의 세대가 혼합해 있어 다양한 거주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가구구성을 갖는 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165)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요자 보다는 주택공급자에 초점이 맞춰져 건설되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부대·복리시설 적용규정 제외되고 주차장 규정 등 건설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공급절차가 단순화 되어왔다. 이러한 각종 규제완화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환경의 질을 낮추어 주거환경, 근린생활시설, 주차시설에 대한 실거주자들의 불만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만족도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통행행태 선호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성현곤, 2012), 실거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조사하여 1~2인 가구의 최저 주거환경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이혜복외, 2013),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만족도를 분석하고 수요자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조영훈외, 2013) 등이 이루어졌다.

성현곤 (2012)

- 주거환경과 통행행태 선호요인 중 주거환경의 안전성 요인이 개선될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 요인들은 주로 범죄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것임.(p154~155)
- 주거환경 요인 중 안전성, 쾌적성, 시설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할 경우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이웃 간 교류 및 사회적 다양성과 관련된 요인은 주거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p157)

이혜복, 김원필 (2013)

-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와 주요 계획요인 상관분석에서는 주변 편의시설, 물리적 환경, 주거정체성 순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p165)
-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는 주변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중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 특히 지하철역사까지의 거리, 1종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성이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거주공간으로서 유헤시설이 가까이 위치하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p165)
- 역세권의 우수한 교통입지를 활용한 '직주근접형' 주거로서 1~2인 가구 위주의 쾌적한 실내·외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저렴하게 하며, 공용 휴게 공간 및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계획개선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음.(p166)

조영훈, 홍경구(2013)

- 주민들은 세대 내의 주택구조 및 성능요인, 일반 원룸형 주택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p249)

거주자 유형에 따른 주거공간 선호도에 관한 연구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시
개인 및 가구의
라이프스타일, 선호도,
트렌드, 주거요구
고려되어야”

- 단위세대간 주거환경에 관한 불만족 요인으로는 부대복리시설의 미비와 세대 간 소음이 제시됨. 도시형 생활주택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부대복리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함.(p249)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가구, 직장인, 독신주의자, 신혼부부 등이다. 다음의 연구들은 맞벌이 신혼부부, 대학생, 젊은 1인 가구 등 다양한 1~2인 가구들의 생활패턴과 특성을 분석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요구하는 서비스, 각 시설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소형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지희, 윤정숙(2011)

- 주거공간에서 반드시 개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공간에 대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침실만 개별적으로 사용’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엌, 화장실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p97)
- 개인 생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함과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적정 공유공간을 배치해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p102)
- 희망하는 부대시설은 세탁실, 휴게시설, 운동시설, 발코니 등으로 나타남. 휴게시설은 개별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친구가 방문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운동시설은 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공간을, 발코니는 세대 내에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p99~100)

안진화, 강순주(2008)

- (20~30대 대학생 또는 직장인)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요구는 휘트니스 센터>코인공용세탁실>사우나실>라운지>카페테리아 등의 순으로, 이웃과의 교류보다는 건강유지 및 생활에 직접 필요한 공용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할 경우 요구도가 높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변 이웃들과의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p302,304)
- 서비스 항목에 대한 요구는 24시간 보안서비스>세탁수거/배달서비스>청소서비스>우편물보관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남. 24시간 보안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1인 가구의 안전 및 방법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p303)

이인선, 강순주(2009)

- (20~30대 싱글남녀) 투자가치가 있는 아파트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입지한 아파트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주택설계요소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향, 공간의 개방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p185)
- 설비 측면에서는 음식물처리기, 자동공기정화시스템, 드레스룸, 붙박이장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음.(p183)

정다운, 강순주(2010)

- (맞벌이 신혼부부) 도시형 생활주택에 거주하거나 구입할 의사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85%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중 90.1%가 신혼기간 또는 규모가 큰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만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서 장기 거주지이기보다는 생애주기에 따른 한시적 거주지로 선호되는 것으로 판단됨.(p181)
-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는 가구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대크기인 80~85㎡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주차공간도 세대 당 1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입

시 고려요소는 입지>자연환경>내부인테리어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실을 제외하고 방3개 규모의 주거를 가장 선호함.(p181)

- 부대시설 중에서는 무인택배시설, 놀이방, 산책로, 피트니스센터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p183)

박수현, 이상훈(2010)

- 공공공간 측면에서, (학생은) 독서실, 스터디그룹 모임장소, 운동시설, (직장인은) 운동시설,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옥상, 로비(홀), 집 앞 방문객이 기다릴 수 있는 장소, (고령층은) 진입하기 쉬운 공중가로(입체가로), 이웃과 어울리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운동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p288)

이인석, 김문덕(2009)

- 국내 오피스텔의 공간적 구성 특성은 복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 공간과 공용공간의 구분은 보이지 않음. 이는 임대 사업의 수익성에 기인한 결과이며, 정작 실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 반영 여부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음.(p63)
- 일본 사례의 경우 평면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구성함.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의 분리는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주출입구만은 주생활 공간과 분리하였음.(p63)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의해서는 사실상 소형 주택을 공급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는 주택법에 따른 엄격한 사업 승인 절차와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기보다 이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강정욱외, 2009),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한 주차장 완화구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이법석외, 2010;배웅규외, 2011),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연구(류훈외, 2011;이종호외, 2012), 1인가구 주거지 공간적 분포를 알아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강정욱, 김기호(2009)

-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금지원율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료 규제를 전혀 할 수 없음. 1인 가구 중 상위 10%이상만이 거주 가능한 월세 50만원 전용면적 20㎡를 기준으로, 12~20㎡ 범위와 20㎡이상인 경우에 차등적인 규제완화와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임.(p121,124)
- 차등적인 규제완화와 지원방안으로 주택기금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 시 지원금액 기준을 ㎡당 일정금액이 아닌 가구 당 일정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안, 주택기금을 통해 수용자에게 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 주차장 완화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p124)

류훈, 배웅규 (2011)

- 도시형 생활주택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외면 받고 있음. 반면,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로 편입되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면서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주거의 질과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됨.(p194)
-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및 건축규모와 관련하여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부대복리시설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건립가능 세대수 확대(150→300세대), 1세대에 한해 일반주택 복합허용,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인 가구 52%가 다양한
소형주택공급 위해
기성시가지의 중심지,
대중교통체계의 결절점에
공급되어야”

조정, 건축심의 대상 기준 완화방안, 용도용적제 완화,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가 필요함.(p194)

배웅규, 신중진, 이범석 (2011)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주차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주택가 주차문제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p183)
- 입주자의 차량소유 및 주차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약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대중교통 연계체계와 공영주차장 확보 등 지역단위 차량동선 및 주차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설계적 접근을 병행해야 함.(p192)

도시형 생활주택 유닛 모듈라 개발 및 공급에 관한 연구

“도시형 생활주택 ‘조립식
건축’ 허용
평균 건축비(간접비 포함)
3.3㎡당 400만원 →
300만원으로”

2010년 국토해양부는 주택 공사기간과 건축비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조립식(공업화 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공업화 주택은 주택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듈(module)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이다. 공업화 주택은 평탄화 작업 후 구조부를 조립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저렴하며, 설계·시공·감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공사기간도 줄어든다. 1993년 공업화 주택 성능인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IMF이후 주택건설 물량의 급격한 감소,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및 분양가 절감효과 미미, 부실공사 여파로 인한 공업화주택 이미지 개선 실패 등의 이유로 공업화 주택 공급업체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최근 소규모 가구 증가에 대응한 주택유형 보급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립식 건축이 허용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위한 조립식 공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2011년 이후부터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유닛 모듈라 개발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균태(2011), 이가경외(2011a; 2011b; 2011c), 이창재외(2012a; 2012b; 2012c)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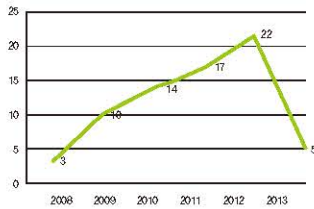
이가경, 임석호 (2011)

- 도시형 생활주택 국가시범사업을 올해 6월에 실시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현재 조립식에 대한 명칭 제한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구법의 분류가 없으며, 표준화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못함.(p110)
- 기능공 부족 및 외국인 의존으로 인하여 심각한 건설시공의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건설기능공 부족문제 해결 및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유닛 모듈라 공법은 대부분의 공정을 공장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기능공을 양성시키고 안정된 직장을 부여하며 미숙련공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기능공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p105)

이창재, 임석호 (2011)

- 유닛모듈라 공법은 친환경적인 건식공법으로 공장에서 구조체 및 내외장재 등을 미리 시공하여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건물을 완성하는 구축방법을 사용하고 인건비 절감 및 건축자재를 재사용함으로써 Recycle, Reduce, Reuse(3R)을 구현할 수 있음.(p11)
- BIM 라이브러리는 부품의 치수뿐만 아니라 특성까지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립기준면과 틈 값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부품의 표준화를 도모함.(p15)
- 공장생산을 80%를 목표로 하는 유닛 모듈라 건축은 설계단계에서 제작된 부품 및 자재의 정보가 담긴 BIM 라이브러리를 공장생산 자동화 프로그램에 제공하여 생산시간의 단축을 도모하고 대량생산을 촉진할 수 있음.(p19)

[도시형 생활주택] 키워드 분석리포트



1. 최근 5년간 국내 발표 논문 수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4
논문수	3	10	14	17	22	5
전년대비 성장률	-	233%	40%	21%	29%	-77%

2. 주요 저널

순위	저널명	전체 논문 수
1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
2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4
3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6
4	국토계획	5
5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
6	한국주거학회논문집	4

3. 국내 주요 연구자

[이현정] [김옥연] [배웅규] [이창재] [한지희] [심우갑] [홍형욱] [최태원]
 [허성욱] [정소이] [임석호] [김미경] [송애희] [이가경] [이혜복] [김영훈] [박준영] [신상영] [강순주]
 [김진욱] [류훈] [성현곤] [이혜복] [김원필] [조민정] [최막중] [이현숙] [문영기] [이창재]

4. 주요 관련 키워드

[소형집합주거] [1인 주거] [BIM] [표준화] [Single-person house hold]
 [도시형 생활주택] [모듈러] [1~2인가구] [라이프스타일] [주거만족도] [고시원]
 [유닛 모듈라 공법] [Urban-life-housing] [공유공간] [탈현장 초고속주택] [1인 가구]
 [주거환경] [소형주택] [주택수요] [One Day Housing] [Urban-type Housing]
 [단지형 다세대주택] [One Person Household] [주거실태] [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주요 논문리스트

* 검색 키워드 : 도시형 생활주택, 1인 가구

* 검색 사이트 : www.auric.co.kr

제 목	저 자	수 록 지	발행일	권 호
1 한국형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내디자인 선호경향과 지침연구	홍이경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06	제10권 2호(통권17호)
2 한국 도심형 노후 공동생활주택 설계안 개발	주서령 ; 이정규 ; 고영은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10	제 10권 2호
3 1인 주거 중심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이인석 ; 김문덕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05	제 11권 1호
4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방향 및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김진욱 ; 김영현 ; 이민우	연구보고서(기본)	200910	2009 n.2
5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아 ; 조경수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10	v.29 n.1
6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관한 연구	강정욱 ; 김기호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11	-
7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위한 주차장원화구역의 현황분석 연구	이범석 ; 배용규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04	-
8 도시형 생활주택의 계획특성 연구	유해연 ; 심우갑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005	v.26 n.05
9 도시형 생활주택의 계획현황 진단	김진욱 ; 한기정 ; 이준형	연구보고서(정책)	201006	2010 n.2

제 목	저 자	수 록 지	발행일	권 호
10 도시형 생활 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공공간 계획 연구	박수현 ; 이상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10	v.30 n.1
11 맞벌이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간요구도	정다윤 ; 강순주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11	2010 v.2(추계)
12 1인 주거 중심의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안	장아름 ; 모정현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11	2010 v.2(추계)
13 주치정원화구역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정기준 개선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배응규 ; 신종진 ; 이범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101	v.27 n.1
14 도시형생활주택을 위한 모듈러 주택 시공의 타당성 분석	김군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04	v.31 n.1(구조계)
15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닛 모듈라 공법 설계에 관한 연구	이가경 ; 임석호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04	2011 v.1(춘계)
16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거의 계획특성 및 개선방안 연구	조민정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1104	v.20 n.2(통권 85호)
17 소형생활주택의 유형별 공급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과제 도출 연구	류훈 ; 배응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106	v.27 n.6
18 도시형 생활주택의 적정 공구법 고찰	임석호 ; 이가경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10	v.31 n.2(계획계)
19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POD방식 도시형 생활주택 제안	박수현 ; 김병진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110	v.2011 n.01
20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닛 모듈라 공법 설계에 관한 연구	이가경 ; 임석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110	v.22 n.5
21 도시형 생활주택의 투자현황 및 투자요소 분석	김수경 ; 이현정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11	2011 v.2(추계)
22 유닛 모듈라 공법을 적용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BIM Library 개발	이가경 ; 임석호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11	2011 v.2(추계)
23 소밀지 밀집형 도시공간 구조에서 합필 공동개발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계획에 대한 연구	허상우 ; 오상현	한국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11	-
24 대학생의 주거가치관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선호경향	방세영 ; 홍형욱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04	2012 v.1(춘계)
25 [논문] 주거환경과 통행행태 선호요인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한곤	국토계획	201204	v.47 n.2(통권 190호)
26 대학생들의 주거열망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환경의 중요도	엄상민 ; 홍형욱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04	2012 v.1(춘계)
27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최태원 ; 김영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04	v.32 n.1(계획계)
28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이종호 ; 안건혁	한국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04	-
29 도시재생적 관점의 도시형생활주택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허별 ; 이우형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04	v.32 n.1(계획계)
30 도시형생활주택 거주환경의 중요도-성취도 및 효용도 분석	성순아 ; 한인덕 ; 황희연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04	2012 v.1(춘계)

제 목	저 자	수 록 지	발행일	권 호
31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도시형 생활주택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우소연 ; 남경숙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10	제14권 2호
32 모듈러 기반 도시형 생활주택의 BIM 설계시스템 개발 연구	이창재 ; 임석호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10	v.32 n.2
33 노인 1~2인가구의 거주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방안 탐색연구	김다슬 ;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11	2012 v.2(추계)
34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발특성에 관한 연구	이현숙 ; 양승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11	v.28 n.11
35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위한 복수 프로젝트 관리방법 제안	양간재 ; 최승범 ; 김경환 ; 백화숙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11	-
36 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계획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박재영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11	2012 v.2(추계)
37 유닛모듈러 주택의 BIM 라이브러리 개발 연구	이창재 ; 임석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212	v.23 n.6
38 유닛모듈러 기반 도시형 생활주택의 BIM 모델링 프로세스 개발 연구	이창재 ; 임석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212	v.12 n.6(통권 58호)
39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성 평가 모델에 관한 연구	문광배 ; 고성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04	v.33 n.1
40 설문조사를 통한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방안 연구	이해복 ; 김원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304	v.29 n.4
41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조영훈 ; 홍경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04	-
42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최상희 ; 정소이 ; 김용태 ; 정경석	연구보고서	201306	2013-03호
43 1인 가구의 생활특성과 커뮤니티 공간 및 서비스 요구도	안진화 ; 강순주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11	2008 v.2(추계)
44 1인 가구 요구 분석에 따른 집합주택단지 계획	진해석 ; 홍영균 ; 홍기섭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10	v.29 n.1(계획계)
45 1인가구를 위한 집합주거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허성욱 ; 홍기섭 ; 홍영균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10	v.29 n.1(계획계)
46 상글남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1인가구 주택상품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이인선 ; 강순주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11	2009 v.2(추계)
47 1인 가구 라이프스타일에 밀착한 욕실 공간 계획	이예리 ; 최정민 ; 김진영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11	2009 v.2(추계)
48 1인 가구의 주거선택요인이 원룸 선호도 ·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영행 ; 최민섭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 <주거환경>	200912	v.7 n.2(통권 12호)
49 1인가구 주거실태 분석	김옥연 ; 문영기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 <주거환경>	200912	v.7 n.2(통권 12호)
50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기준 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김도연 ; 윤재신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04	2010 v.1(춘계)
51 [논문] 소득별 1인가구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신문진 ; 안건혁	국토계획	201008	v.45 n.4(통권 178호)

제 목	저 자	수 록 지	발행일	권 호
52 [논문] 1인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신상영	국토계획	201008	v.45 n.4(통권 178호)
53 거주자 유형에 따른 1인 가구 주거 계획 연구	이운서 ; 심우갑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10	v.30 n.1(계획계)
54 다양한 가족유형의 세대교류 커뮤니티 활성화를 적용한 공동주택 계획에 관한 연구	이은지 ; 서귀숙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11	2010 v.2(추계)
55 고시원 운영 실태의 문제점 분석	정소이 ; 박준영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11	통권19호
56 1인가구를 위한 소형집합주거 공간계획에 나타난 주요특성 및 선호	김미경 ; 장은혜 ; 송애희 ; 유진 ; 최지은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11	2010 v.2(추계)
57 1인 가구의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조주현 ; 김주원	부동산학연구	201012	v.16 n.4
58 일시적 거주개념을 적용한 1인용 소형주거공간의 유형 및 특성	김미경 ; 송애희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04	2011 v.1(춘계)
59 가계 자산구조와 주택소유결정요인 분석	김옥연 ; 문영기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 <주거환경>	201106	v.9 n.1(통권 15호)
60 [논문] 서울시 1인가구의 주택수요 예측	신미림 ; 남진	국토계획	201108	v.46 n.4(통권 185호)
61 대학생 1인 가구의 생활패턴 및 주거요구에 따른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평면계획방안	한지희 ; 윤정숙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108	v.22 n.4
62 젊은 1인가구를 위한 소형집합주거의 공간계획 특성분석	송애희 ; 김미경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10	제13권 2호
63 1인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거실태 분석	한지희 ; 정소이 ; 박준영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10	v.31 n.2(계획계)
64 미국 20-30대 1-2인가구의 주거비 부담 실태	이현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204	v.23 n.2
65 1인가구 주거에 대한 선행연구 경향	김진영 ; 이현수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04	v.32 n.1(계획계)
66 한국과 미국의 1인가구 특성 비교	이현정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04	2012 v.1(춘계)
67 1인 가구를 대비를 위한 일본 소형공동주택 계획특징에 관한 연구	최태원 ; 김영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10	v.32 n.2
68 남녀 1인가구의 주거가치관과 공간선호도 비교 연구	김민서 ; 강순주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11	2012 v.2(추계)
69 서울시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유형에 관한 연구	이동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12	v.28 n.12
70 1인가구의 수요특성을 고려한 주택유형 개발 연구	정소이 ; 박준영 ; 김홍주 ; 한지희 ; 김인기 ; 김진철	연구보고서	201212	2012-13호
71 [논문] 1인가구의 주택점유형태	박보림 ; 김준형 ; 최막중	국토계획	201302	v.48 n.1(통권 196호)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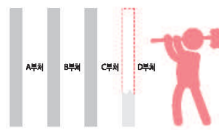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



공공정보 공개확대로
「국민의 알권리」충족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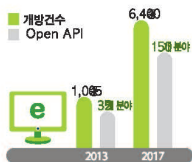
정부 내 칸막이 제거로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제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정보공유와 디지털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구현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강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정부3.0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갑니다.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안전행정부
www.gov30.kr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Acrotower Office,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